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24 - Winter 2016

한옥 정책, 10년을 돌아보다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옥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진흥 사업 추진이 이어져 왔다. 2015년에는 한옥 진흥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 이론 한옥 진흥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한옥 진흥 정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24
Winter 2016

발행
2016년 12월 31일

발행인
김대익

편집책임
성은영

정책이슈 기획
신치후

편집
고효진, 이미영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86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예스러운 돌담 사이로
고아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펼쳐진 소담한 정원과 우아한 기와지붕,
그리고 운치 있는 처마.
한옥의 멋과 정취는 몇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옥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한옥 정책, 10년을 돌아보다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신치후	006
한옥의 확장과 진화	김용미	016
한옥 시공기술의 발전과 지향점	김왕직	021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	권영상	028
건축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역정	이강민	037

auri 연구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	신치후	046
------------------------------------	-----	-----

통계자료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여혜진	048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건축·도시 관련 국제적 합의와 과제	이현지	054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황문호	060
	상인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김상희	064
국내동향	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엄정희	069
	빈집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박성남	073
해외단신	밴쿠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 외		078
국내단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추진 외		083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공간 관련 전문지식센터, 독일 BBSR	백한열	090
-----------------------	-----	-----

장소탐방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 불암골 행복발전소	정영섭·홍영애	096
농촌마을의 양곡창고 이야기 -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최정우·이승윤	112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8
·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134
·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개최	136
· 2016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37
· CPTED 세미나 개최	138
· 2016 제5차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139
·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 개최	139
·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140
· 2016 공공건축관계자 교육 실시	141
· 도시재생 스타트업 토크쇼 개최	14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한국해비타트 MOU 체결	143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MOU 체결	143

Review of the
Past 10 Years of Hanok Policy

정책이슈

한옥 정책,
10년을
돌아보다

1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이후 본격적인 한옥의 브랜드화 정책이 10년을 맞이했다. 그간 중앙정부 등의 꾸준한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진흥사업 추진에 따라 현대한옥의 실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한옥진흥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명시되었다.

이에 맞추어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설계·시공·이론 등 한옥진흥의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성과, 건축적 사회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향후 한옥 진흥정책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006

한옥의 확장과 진화
016

한옥 시공기술의
발전과 지향점
021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
028

건축 동도서기
(東道西器)의 역정
037

한옥 정책,
10년을
돌아보다



경리부 한옥 어린이도서관



보령 한옥마을관리소



전라도 아담의마을 한옥마을관리소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006

한옥의 확장과 진화
016

한옥 시공기술의
발전과 지향점
021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
028

건축 동도서기
(東道西器)의 역정
037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 지난 10년간의 노력 결과 현대 생활에 적합하며 기존 한옥 대비 저렴한 한옥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지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거주자 교육 등으로 방향 전환을 할 시기이다. 또한 한옥 정체성을 구현하는 한옥 구성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옥의 확장과 진화 | 신한옥은 현대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쉽고, 불편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더불어 현대의 다양화된 용도와 기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점진 발전하고 있다. 이는 한옥이 단순히 과거의 건축양식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옥 시공기술의 발전과 지향점 | 한옥을 현대화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옥 부재에 적합한 다양한 집성 기술을 개발하고, 집성목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내진건축기술의 집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성능·기술이 아니라 한옥의 정체성과 진정한 정신성이 반영된 목조건축 모델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 | 현대적 거주성은 한옥마을이 현재의 주택·도시시장에서 지속가능한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개별 한옥이 잘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 주차와 도로, 안전, 기반시설의 문제와 같은 집합으로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다.

건축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역정 | 한옥현상은 세속적인 형태나 추상적인 공간을 분리해내지 않고 한옥을 짓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건축 동도서기의 역정을 면밀히 살펴 이를 극복한다면, 한국건축의 미래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진흥정책 10년의 성과와 방향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한옥진흥정책의 배경

최근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단순히 눈으로 보는 한옥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한옥이 많이 건축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한옥들에 대한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면서 한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서울 북촌과 전주 한옥마을은 어느 사이 국민들에게 친숙한 장소로 기억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특히 최근 한옥마을 부지 분양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의 한옥마을은 평균 경쟁률 78:1을,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마을에서는 최고 경쟁률이 299:1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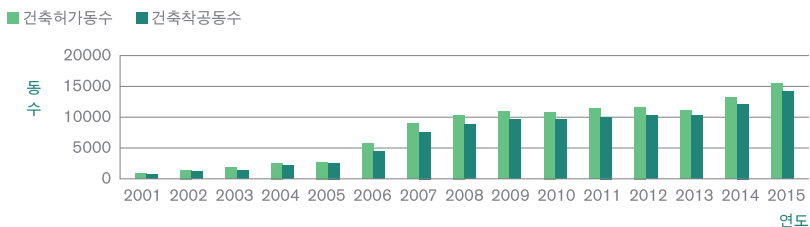
한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인 경제발전 이후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식·한복·한국음악 등 전통문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정체성의 기반으로서 전통문화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옥 관련 정책의 방향은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한옥과 한옥의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과밀화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인구사회학적으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들 고령인구는 자녀를 분가시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주택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이 아파트 중심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19만 3,691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여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년대비 아파트는 14.0%, 연립 다세대는 33.5%, 단독 다가구는 25.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미약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목조 건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목조건축의 용도는 대부분이 주거용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한옥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조건축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은 목조에 한 부분인 한옥건축산업 성장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및 건축물 착공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2016.1.11.

목구조 건축물 신축, 증축/개축/이전/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동수 및 연면적 통계

연도별	신축 동수	신축 연면적	증축/개축/이전/ 대수선 동수	증축/개축/이전/대수선 연면적	용도변경 동수	용도변경 연면적
2011	8,593	845,412	2,317	92,418	665	50,522
2012	8,855	746,819	2,313	76,346	686	46,948
2013	8,921	864,230	2,027	81,240	762	49,540
2014	10,067	988,037	2,249	80,469	747	131,784
2015	11,970	1,176,617	2,711	88,213	714	48,719

자료: 국가지표체계,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4)

한옥진흥정책의 주요 성과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

중앙정부의 한옥진흥정책의 시발점은 2007년 마련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으로 볼 수 있다. 10여 개의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세계문화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표로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 등 6개의 고유문화를 생활화·산업화·세계화하여 세계적 문화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였다. 한옥 분야에서는 ①전통한옥 원형의 보전 ②한옥건축 국내 기반 구축 ③한옥건축의 세계화 추진이라는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각각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전통한옥 원형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건축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그리고 공공시설의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옥의 관광 자원화와 한옥식 정원모델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의 마무리 시점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이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2010~2014년)을 수립하였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 한옥 분야

전통한옥 원형의 보전	한옥건축 국내기반 구축	한옥건축의 세계화 추진
전통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한옥의 관광 자원화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 퍼블릭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다. 이에 따라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옥을 보급 및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하여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들도 마련하였다. 국가한옥센터 역시 이때 만들어져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하여 건축 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을 받게 되었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옥 공간 활성화 사업’(2009~2010년)에 총 8억 원을 지원하여 구로구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 여수 시립 현암도서관, 안산 관산도서관 등의 공공건축 분야에서 한옥을 건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개수·보수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적 생활문화공간과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국적 실내 공간 명품모델’을 개발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적 실내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쉽게도 시범사업의 성격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옥 관련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우수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한옥스테이’ 사업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인 ‘명품고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체험한옥과 한옥마을을 소개하는 사이트(<http://hanok.visitkorea.or.kr/kor/hanok/index.do#>)를 운영한다.



안산 관산도서관 내 한옥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용도 시설의 한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한옥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35곳의 주민센터, 도서관·박물관, 숙박·체험시설 등의 공공용도 한옥 건립과 마을단위 계획 수립에 5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숙박·체험시설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지양하고 다양한 용도의 공공용도 시설에 지원을 하였다.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사례로, 방문자와 운영관리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또한 한옥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한옥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2011~2014년)을 진행하여 4년간 한옥설계 전문인력 600여 명,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650여 명을 배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중지된 상태이다. 반면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 캠프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거의 편입되지 않은 한옥설계 교육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많은 건축 관련 전공학생들이 한옥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한옥의 기술을 혁신하고 건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한옥기술개발 R&D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결과들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 2단계 실증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3단계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 현황

연도	예산 (백만 원)	지원내역		지원금(백만 원)
		사·도 기관	용도	
계	5,330	35곳		
2008	250	전남 영암군	한국음식문화센터 조성	150
		충남 공주시	구들장체험 숙박촌 조성	100
2009	500	경기 이천시	도자예술촌 한옥 건축 체험공간 조성	100
		충남 부여군	한옥생활체험관 건립	100
		전남 장흥군	원목생활가구단지 조성(한옥숙박관)	100
		전남 영암군	한옥표본집 제작	100
		서울시	한옥문화관 조성	100
2010	500	서울 구로구	한옥 어린이도서관 조성	300
		전북 전주시	전통한옥 체험 홍보교육장 건립	200
2011	500	서울 은평구	은평박물관 건립(한식정자 설치)	200
		광주 남구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 건립	170
		강원 강릉시	전통차 체험관 건립	130
2012	900	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	200
		경기 김포시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	150
		경남 산청군	산청 약선음식 체험관 건립	200
		전남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 건립	200
		경기 이천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한옥건립	150
2013	800	경기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	200
		충남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200
		전북 고창군	고창 한옥체험마을 조성	200
		서울 성북구	어린이집 건립	170
		서울 성북구	한옥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0(용역)
2014	850	경기 수원시	장안동 관광안내소 및 문화시설 조성	200
		서울 노원구	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200
		전남 강진군	달빛 한옥마을회관 조성	150
		충북 괴산군	전통한옥체험관 조성	150
		서울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건립	120
		경북 경주시	전통한옥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	30(용역)
2015	730	서울 노원구	국공립 한옥어린이집 건립	100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한옥문화시설 건립	130
		충남 금산군	한옥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	100
		전남 영암군	한옥체험관 조성사업	200
		전남 강진군	다산 한옥관 조성사업	200
2016	300	강원 태백시	한옥 경로당 신축사업	150
		경남 함안군	무릉마을 예절교육관 건립	150



영암군 한국음식문화센터(2008년)



공주시 한옥생활체험관(2009년)



강릉 전통차 체험관(2011년)

이 외에도 2011년부터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사진, 계획(아이디어), 준공(건축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준공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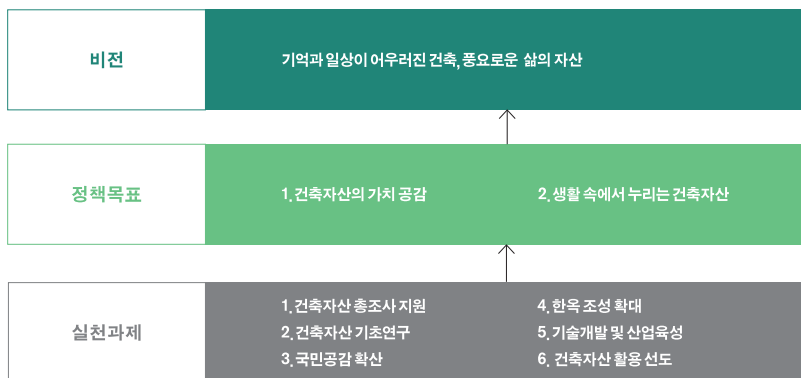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도적으로는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자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사업시행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법의 시행이 지자체의 건축문화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한옥 고유의 건축 특징을 반영하고 정체성을 높이며, 지역별·경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성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 ‘한옥건축기준’을 공시하였다. 전통건축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되 현대한옥의 다양한 발전양상을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축자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한옥 관련 조례는 63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으며, 크게 한옥보전·진흥 지원조례와 한옥체험시설 및 민박시설 관리 운영 지원조례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구역 내의 한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전라남도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가장 많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27개 지자체) 다음으로 경상북도(7개 지자체) 경상남도(5개 지자체) 충청북도(4개 지자체)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1차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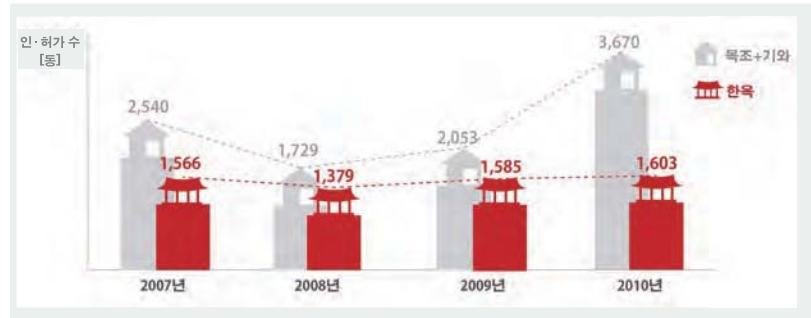


한옥 및 한옥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는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거주자와 관련 전문가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우수한 한옥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 우수 한옥 한옥인 인증제’(2016년)를 시행하였다. 2001년 이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한 서울의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된 서울 우수 한옥에 참여한 관련 인물과 업체를 ‘서울 한옥인’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시상과 함께 한옥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러한 중앙·지방정부의 한옥 관련 정책과 사업으로 한옥 관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옥진흥정책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한옥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한옥은 총 6,133채로 매년 1,533채씩 건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옥건축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경제상황과 기타 외부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용도별 한옥의 특성은 근린생활시설이 43%, 주택이 36% 정도로 나타난다. 아울러 펜션(한옥숙박체험), 카페, 음식점 등으로 한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한옥 활용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의 효과로 전국에 한옥 공공건축물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2015년 현재 127곳 414동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규모가 1개동 단독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체험관, 전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수



자료: 이강민 외,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현황 및 동향 분석", 한옥정책브리프 제2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한옥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한옥 통계는 현재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한옥센터가 한옥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대구·전주·광주 등 주요 도시의 한옥전수 조사를 벌였고,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2018년까지 한옥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가한옥센터의 「한옥통계 백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한옥 수의 추정치는 43만 6,000여 동으로 2014년의 39만 여 동보다 4만 6,000여 동(약 1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 한옥의 수와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확정되는 한옥의 수가 합해져서 나타난 수치이다.

한옥진흥정책의 방향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한옥진흥정책이 마련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한옥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관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옥사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신축 한옥의 수가 증가하였고 기존 한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서울·대구와 같은 대도시 내에서 멸실 우려의 대상이던 한옥과 한옥마을은 도심지 내에 새로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변화하였고, 전남의 행복마을은 도시민을 전남으로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옥을 진흥하겠다는 기술 분야에서의 노력 결과 현대 생활에 적합하며 기존 한옥대비 저렴한 한옥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결과와 함께 한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부분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이 ‘관심 밖 주거유형’이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면 이후의 한옥진흥정책은 기존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한옥 관련 정책은 현재 국토교통부 위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다른 유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옥의 한국적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옥건축 양식으로의 외연을 확장하거나 농산어촌에 산재해 있는 한옥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가 이용하는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옥 보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부분 개별 신축한옥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거주자 교육 등으로의 방향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장경간 다층의 한옥기술과 내진·면진과 같은 현대건축에서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한옥기술 R&D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한옥진흥의 기반이 되는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요자 계층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전통한옥부터 신한옥, 한옥건축 양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통에 치우친 고가의 부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렴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부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한옥 정체성을 구현하는 한옥 구성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1 이강민, 이종민, 옥채원, “2007-2010년 한옥 인허가 현황 및 동향 분석”, 한옥정책브리프 제2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한옥의 확장과 진화

김용미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옥의 현주소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 지어진 한옥은 흔히들 ‘신한옥’ 또는 ‘현대한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봐 온 전통한옥, 그리고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근대한옥과 비교해서 기능·공법·재료 등 많은 부분이 현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한옥은 현대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춥고, 불편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더불어 현대의 다양화된 용도와 기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최근 활발히 짓고 있는 은평한옥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 현대화된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이나 전주한옥마을 같은 곳에는 이미 많은 소규모 상점들이 한옥으로 들어섰다. 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옥 유치원, 한옥 어린이도서관, 한옥 전시관 등 규모가 크지 않은 많은 건물에서 한옥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보면 한옥이 단순히 과거의 건축양식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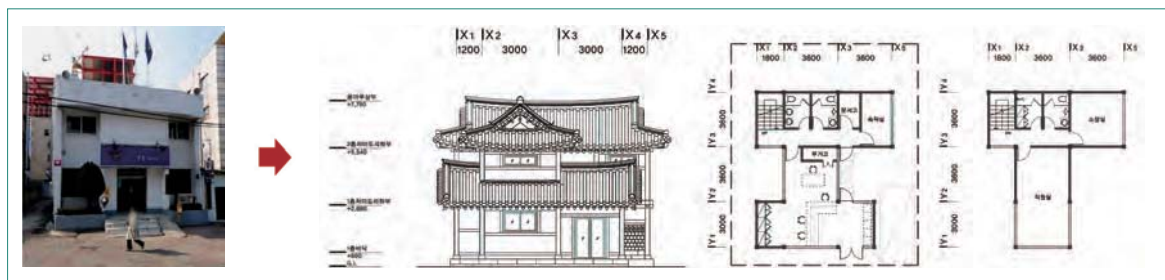


현대적 공법이 적용된 은평한옥마을의 주택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옥이 더욱 확장·진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다변화, 구조·재료의 다양화, 그리고 중층화가 이루어져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의 다변화

지금까지의 한옥이 대부분 주택과 소규모 상점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한옥은 좀 더 다양한 용도의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그 예로 어느 동네에나 있고 주로 2~3층 규모인 치안센터나 주민센터·소방서 등 비교적 소규모의 공공건물부터 한옥으로 건립한다면, 민간에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방배동 한옥치안센터 계획(안)



저층 한옥아파트 계획(안)

자료: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대한주택공사, 2009.

또 그러한 시도로 인해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도서관·체육관·청사 등의 대규모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호텔·아파트 등의 민간 건물에서도 한옥이 접목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한옥으로 시도해 보지 못한 많은 용도의 건물이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한옥으로 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한옥 구조·재료의 다양화

목재의 가구식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옥은 근본적으로 다층구조와 대공간을 형성하기에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옥으로 계획하더라도 다층구조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경우, 남산 국악공연장이나 해남 윤선도전시관처럼 한식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수직적으로 결합하거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기본으로 목재를 의장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도 나름대로의 성과이지만, 한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조와 재료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전통가옥을 경량목구조로 변환하여 성공한 세키스이 하우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옥의 산업화와 단가절감을 위한 경량목구조의 한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구조용 집성목을 이용해 대공간을 형성하거나 목구조와 철골구조, 또는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구조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산 국악공연장 전경



해남 윤선도전시관 내부



일본 세키스이 하우스

자료: 세키스이 하우스 홈페이지(www.sekisuihouse.com)



구조용 집성목을 이용한 한옥의 대공간

한옥의 중층화

한옥의 중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 기능이 요구하는 높은 층고를 어떻게 한옥 스케일의 입면비례로 만들어 내느냐이다. 전통한옥에서의 중층은 1·2층의 층고가 높지 않아 인간적 스케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1층은 높고, 2층은 낮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여서 2층이지만 꺾층해 보이지 않게 한다.

2층 이상의 한옥을 건립할 때 건물을 수직으로 형성하고, 마지막 층에만 목구조한옥을 올리는 방식은 입면의 비례가 맞지 않아 꺾층해 보이고, 전혀 한옥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한옥에서는 인간적 스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층을 앞에, 2층을 뒤에 놓는 방식으로 1·2층 건물을 결합한다. 아울러 수직한옥일 경우에는 층마다 수평으로 여러 번 나눔으로써 스케일이 줄어 보이게 해야 좀 더 한옥스러운 입면이 된다.



덕수궁 석어당



내소사 봉래루

이러한 한옥의 입면비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한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맺음말

한옥 용도의 다변화, 구조·재료의 다양화, 중층화를 통한 한옥의 확장과 진화는 궁극적으로 대규모 단지로서의 한옥 조성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옥들이 모여 형성하는 가로 및 지역경관은 국적불명의 풍경 대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와 동네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옥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옥을 과거의 건축양식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옥의 발전 또는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시각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옥 가로경관

한옥 시공기술의 발전과 지향점

김왕직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옥 시공기술 개발의 배경

한옥기술개발은 2007년 국격 향상을 위한 한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건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옥을 현대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비가 비싸다는 것과 춥고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눠 한옥기술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1단계(2009~2013년)에서는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거주성능이 확보된 저렴한 대중한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정도의 규모에서는 3.3m²



명지대학교 내 명지정사

당 1,200만 원 이상 하던 한옥의 건축비를 700만 원 대로 낮추었으며, 기밀 및 단열성능은 현대 단독주택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개발한 것은 시공기술뿐만 아니다. 설계기술이나 공정 및 현장관리, 기와 등 제품개발도 있었다. 또 구조 및 기밀성과 단열기술, 창호개발 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단계 실증을 통한 연구결과물은 명지대학교 내의 '명지정사'와 은평구 한옥마을 내 '화경당'이라는 문학전시관이 있다. 두 시범 한옥은 언제라도 관람이 가능하다.

2단계(2013~2016)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을 통해 검증해 보고 보급 확산을 위해 소규모 공공건축까지 한옥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은 5곳의 지자체에 시행되었다.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내 주민자치센터, 수원의 화성 내 한옥기술전시관, 강릉 오죽헌 앞의 한옥마을, 순창의 공공어린이집, 나주 농업기술원 내 교육관 등이다. 2단계 실증과 연구를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었으며, 공공건축에도 한옥기술을 접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건축을 포함해 현대건축에서 요구하는 대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공과 구조,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한옥 3단계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건축비가 상승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진건축기술이 한옥에도 접목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목조건축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에서는 30층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건축도 목조로 건축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수입해서 쓸 수 있으며, 새로 개발하는 것



은평 한옥마을 내 화경당

보다 경제적인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목재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한국만의 정체성과 모듈이 반영된 대공간 한옥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한옥 주요 공정의 시공기술

전통한옥에서 공사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뼈대를 이루는 목구조 부분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따라서 공사비와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구조 부분에 대한 시공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한옥을 서양식 구조분류방식에 따른다면 중목구조(重木構造) 방식으로 경량목구조와 대비된다. 흔히 2×4로 대변되는 경량목구조는 목재가 건축 구조체임에는 틀림없으나 벽 속에 모두 감춰져 목재가 보이지 않는 구조법이다. 목재의 소비 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목재가 갖고 있는 질감과 촉감,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서양에서도 이제 중목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는 재래구법(在來構法)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중목구조를 개선한 현대 중목구조를 개발하였다. 시작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걸린 긴 여정이었고, 이제 목조주택 중에 80%가 재래구법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15%가 프리패브 목조주택이다.* 재래구법은 서양의 2×4공법을 수입하면서도 모듈을 바꿔 일본화한 것으로, 기둥과 보 일부를 노출하여 내부에서는 중목구조의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즉 서양식 2×4와 일본 전통 중목구조를 결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단열 등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지금은 노출되는 목재의 비율을 높여서 중목구조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4 부분도 일본 전통 모듈로 바꿔 직수입하지 않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였다.

한옥의 구조적 정체성은 중목구조라는 것이며, 전 세계의 경량목구조가 중목구조로 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한옥에서도 중목구조는 지켜야 할 구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는 목재의 소요량을 줄여야 하고, 비틀림·갈렘·부식 등의 성능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이번 시공기술의 목표였다. 목재의 소요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부재의 최적단면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인

* 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編著, 「日本の住宅がわかる本」, PHP研究所, 1994, pp.116-117.



프리컷을 통한 치목비 절감과 집성재를 통한 뒤틀림, 갈라짐 방지



원목과 집성재를 혼용함으로써 집성재만을 사용한 것에 비해 재료비 절감

방재를 생략하여 목재소요량을 줄였다. 인방재의 생략은 기밀성 확보에도 효과가 있다.

또 구조부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벽체와 만나는 부분의 단면 상세를 개발하였고, 프리컷을 통해 가공비와 생산효율성을 높였다. 뒤틀림·갈라짐·부식 방지를 위해서는 집성재를 제안하였고, 기존 집성재는 정방형 소단면 부재를 집성하기 때문에 미적으로 좋지 않아 장방형 단면으로 집성하는 집성부재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하면 노출된 부분은 원목처럼 보이고 양쪽 벽체와 만나는 부분에서 접합 부분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미적인 문제가 없다. 장기적으로 한옥부재를 모듈화하고 제품화하여 시장에서 장기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변형이 없는 집성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은 집성재가 원목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집성재의 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과 제품화를 통한 가격절감은 미래 신한옥 시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옥에서 두 번째로 공사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붕이다. 전체 공사비의 25~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붕공사에 대한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 서까래를 사용하고 적심과 흙을 올린 다음 전통기와를 잇는다면 현대장비와 공법을 사용해도 공사비 절감과 성능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와는 재료와 공법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재료 측면에서 전통기와는 가스나 기름으로 굽기 때문에 CO₂ 발생 측면에서는 결코 친환경재료라고 할 수 없다. 재료를 바퀴 굽지 않고 압축성형 방법 등으로 생산되면 혁신적으로 CO₂를 줄일 수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시멘트 생산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압축성형한 기와와 화산재·PE 등을 혼합한 기와를 개발하였다. ‘슬래그기와’는 CO₂를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표면 코팅의 문제가 있었고, ‘화산재기와’는 가격이 50% 수준이지만 변형과 플라스틱 질감으로 인한 이미지의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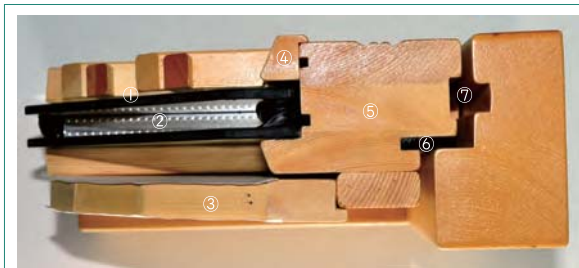
아직은 토제기와에 대한 강한 믿음과 맹신이 다른 재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2단계에서는 토제기와의 모양을 바꿔 방수성능을 높이고 건식공법이 가능한 기와를 개발하였다. 이 경량한식토기와는 기와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어서 지붕 하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하부 구조체의 부재단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토제기와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료 절감, 부재단면 축소, 겨울에도 공사할 수 있는 공정상

의 이점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공법에서도 전통의 습식공법은 건조 등 공기가 길고, 지금과 같은 기계생산 기와는 무게도 무겁고 표면이 매끈하여 흙과의 접착성이 약해 이완 및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한옥은 건식공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와를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지진 등의 진동에 박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옥의 주요 공정 가운데 세 번째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창호이다. 창호는 건축공법의 문제보다는 제품의 문제이다. 성능 개선이 중점이며, 제품 생산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디자인과 물리적 개폐성능보다는 단열성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유리(페어그라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리를 사용하면 무게가 대폭 증가하여 창틀이 목재일 경우 창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고, 창호 고정철물의 강성과 이를 물고 있는 목재 문얼굴의 접합부가 파손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알우드’처럼 알루미늄 또는 철판으로 보강한 창틀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철물은 성능 때문에 주로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 철과 나무를 결합할 경우 노출 부위의 미관이 떨어지고 창틀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도 따른다. 철물도 무게를 견디기 위해 과중하고 여닫이의 경우 중앙에 문설주가 서거나 완전 개폐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연구단에서는 미감과 한옥의 분위기를 위해 창틀도 3겹으로 집성한 집성재를 사용하였으며 개폐의 편의성을 위해 전통창호의 덧창과 영창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내부 영창은 창호지를 발라 한옥의 분위기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덧창은 페어그라스를 끼워 방법과 단열·내구성 등을 충족시켰다. 창호외관을 위해서는 세살창살을 유리 바깥에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창호의 상세와 세부 기능

- ① 세살창과 유리의 분리 유리의 오염을 방지하고 빗물이 머물지 않도록 하여 부식 방지
- ② 2중 유리 단열성능 및 방범성능 확보
- ③ 탈부착식 영창 이중한지마감으로 단열성을 보강하고 실내 한옥분위기 연출 및 인테리어 효과, 교체식으로 유지·관리 편리
- ④ 세살창 결침턱 맞춤 빗물 침투를 방지하고 유리와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⑤ 3겹 집성 뒤틀림 및 변형 보강
- ⑥ 가스켓 기밀성 확보 및 누수 차단
- ⑦ 물끊기장부 빗물침투를 막고 통기성을 확보해 부식 방지



여달이 목재 시스템 창호



분리가 가능한 명창

이때 주의할 것은 창살이 유리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어야 먼지가 끼지 않고 청소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충족하였으나 철물은 기성 수입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적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관과 개폐의 자유로움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 때문이다.

이 밖에 벽체의 경우는 단열과 기밀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친환경성과 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내부의 경우 황토 등을 마감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벽 중간은 단열성능, 외부마감은 비바람 등에 의한 풍화에 강한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상세와 공법을 개발하였다. 건식이면서도 개발한 디테일을 사용하면 기밀성·단열성·친환경성·내구성 등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호와 벽체의 공사비에서는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향후 한옥시공기술의 지향점

향후 한옥은 부재의 모듈화·제품화·대경간화를 위해 원목 사용을 지양하고 집성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옥부재에 적합한 다양한 집성기술을 개발하고 집성목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주택 규모가 아닌 다층화와 대경간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위해서는 내화·방충·방부 성능을 위한 쿨우드(cool wood) 제품, 내진 벽

과 바닥을 위해서는 CLT(Cross laminated timber) 제품 개발과 동시에 공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제품은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목재산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한국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와의 경우는 과중하게 높은 KS 기준을 수정하여 저온소성 토제기와 개발을 통해 CO₂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건식기와와 철판기와와 같은 새로운 소재의 기와 개발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내구성과 유지·관리 및 제품가격과 시공의 효율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창호의 창틀은 집성을 통해서 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철물의 성능과 기능은 문제가 있다. 시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철물의 개발과 공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호의 방법과 단열성능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단계가 되었다. 따라서 장식화된 세살창살은 제거하고 한옥에 잘 어울리는 질감과 색감의 창열굴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페어그라스를 우윳빛 유리로 사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 각형 서까래를 사용하는 방안, 천장단열 공법발, 단열재를 사용하는 지붕의 경우 결로 방지를 위한 통기성 확보 기술, 바닥의 단열 및 통기성 확보 방안,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접목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급을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한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성능·기술이 아니라 규모에 관계없이 한옥의 정체성과 친환경성·친건강성이 반영된 목조건축모델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에만 편중되지 않는 한옥의 진정한 정신성이 반영된 목조건축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옥기술개발연구단, 「연구성과자료집」, 2013.
- 2 김왕직, 「신한옥 화경당」, 기문당, 2014.
- 3 한옥기술개발연구단, 「한옥기술 부위별 적용기술 설명서」, 2015.
- 4 정영수 외 6인, 「그림으로 보는 신한옥 집짓기」, 화신문화(주), 2013.
- 5 권혁규, 김원호, 「알기 쉬운 신한옥 시공가이드」, 2014.
- 6 豊かな住生活を考える會編著, 「日本の住宅がわかる本」, PHP研究所, 1994.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설계전공 교수

한옥마을의 정취

한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미 10여 년이 되었으니, 한옥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상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서울 북촌과 전주의 한옥마을이 재생의 관점에서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라 할 수 있다. 한옥의 건강적·친환경적·경관적·문화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연구들도 한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우리가 한옥을 좋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의 개별 한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집합적인 한옥마을을 경험하였을 경우도 크다. 실제로 한옥은 일반 현대 건축물 사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합적인 마을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익숙한 하회·양동과 같은 전통한옥마을부터 앞서 언급한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까지 이들은 모두 집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왔다.

이처럼 집합적으로 조성된 한옥마을은 우리가 광복 이후 만든 수많은 현대적인 도시공간과는 묘한 차이점을 이루었고, 이러한 차이점은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시끄럽고 번잡한, 자동차로 가득찬 고밀도의 도시공간을 겪다가 고즈넉하고 조용한, 보행 중심의 저밀도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군데군데 마을 공동의 공간이 있고, 기와지붕의 선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 주변의 지형에서 마치 융기한 듯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장면을 겪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공감각적 정취로 현대인들에게 다가왔다.

그뿐 아니다. 한옥은 다분히 한옥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한옥 안에서 보는 장면을 극도로 고려해서 지어진 건축이다 보니 한옥의 사랑채나 대청에 앉아서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바라보는 경관에서 느껴지는 감흥은 현대적 건축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



양동한옥마을

왜 한옥마을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 한옥마을을 얘기하는가?

우선 한옥은 지금까지 집합적인 형태로 우리의 공간경험에 다가왔고, 한옥의 가치는 도시에서 집합적으로 있을 때, 풍부한 외부공간과 개별한옥에서의 경험까지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현대적 단독주택들 사이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는 한옥은 한마디로 '어색함의 극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적 DNA 속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공간적 경험에서 한옥이 서로 집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익숙해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에 한옥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요, 한옥에 대한 관심의 귀결점은 결국 한옥마을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보다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이다. 어느 산업 분야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속에서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남아야 한다. 한옥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건축·도



전주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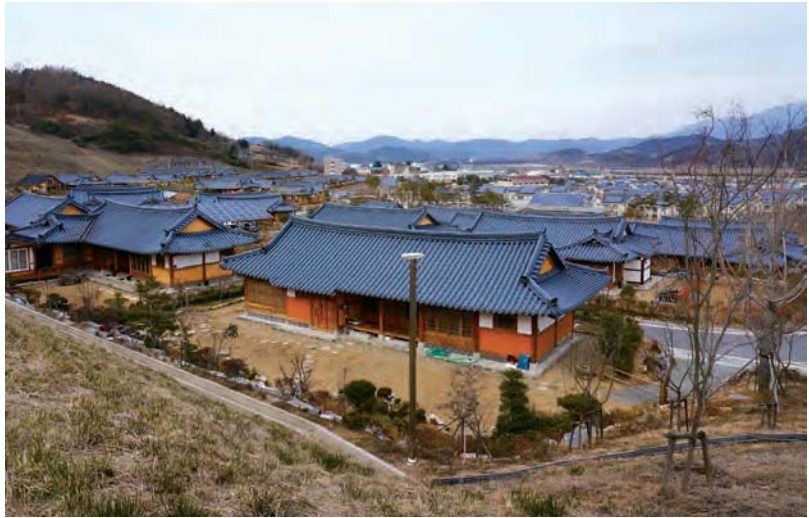
북촌한옥마을의 모습

시·조경 관련 대학에서 한옥을 실용적인, 현재 도시·건축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의 관점에서 교육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한옥을 생산할 수 있는 몇몇 업체들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서 한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옥마을은 한옥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존속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매년 변화는 있으나, 대략 1년에 50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중 1%인 5,000호 정도만 한옥으로 공급된다면 대략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옥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옥의 공급은 1년에 1,000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 할

* 2014년 52만 호, 2015년 77만 호, 국토연구원



화순 잠정 햇살마을

수 있다. 결국 이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별단위의 한옥으로는 어렵고 한옥마을 형태가 일반 주택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한옥이 현대적 거주성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은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처럼 보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북촌과 전주를 비롯하여 많은 한옥마을들이 기존에 한옥이 있던 마을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처음 접근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대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그러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예산 당국에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보전된 한옥마을이 가져오는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의 집합적 경관의 향상으로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둘째는 도시에서 관광의 요소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한데, 정부의 재정투자가 개별적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과정

에서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만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는 그만큼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이미 북촌과 전주를 비롯한 많은 기존의 한옥마을들이 상업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그 비판이 제기되었고,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한옥마을에 상업·관광적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한옥마을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한옥마을의 가치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잘 만들어진 관광목적의 한옥마을은 계속적인 매력요소로 아직도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셋째는 주택의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원래 한옥의 가치에 가장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관점에 비해 사뭇 낮설게 다가온다. 특히 고소득층을 위한 고가의 한옥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적 거주를 위한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주택정책에서 굉장히 낯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낯선 대상인 만큼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 기획한 한옥마을 중에 실제 성공한 주거로서의 한옥마을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택의 하나로서 한옥마을이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은 한옥을 건축정책·도시정책·주택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화정책이나 관광정책에서 접근한 원인이 크다. 한옥을 지을 땅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한옥을 지을 전문가가 없으며, 한옥을 공급하는 번듯한 건설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한옥이 주택으로 인식되고 주택시장에서 작동할 것인가?



공주한옥마을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한옥마을이 현대의 건축문화, 도시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있다. 그것은 개별 한옥뿐만 아니라 집합으로서의 한옥마을로 현대적 거주성을 시급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탄생해야 할? 한옥마을

그렇다면 현대적 거주성으로 탄생한 한옥마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현대적 거주성은 한옥마을이 현재의 주택·도시시장에서 지속가능한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개별 한옥이 잘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합으로서 한옥마을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주거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도 개별 아파트 평면뿐 아니라 학교나 상점 같은 주변의 편의시설, 보행·자전거·교통의 편리성, 단지 내 공원 같은 시설, 단지에서 바라보는 경관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옥마을의 현대적 거주성은 이런 점에다가 기존 한옥마을이 가지는 정취와 공간경험들도 충분히 녹아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한옥마을에서 현대적 거주성을 가지게 되려면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

첫째는 입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전통적 한옥조성방식은 입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지에 따라서 한옥마을의 공간구조가 거의 결정되고, 한옥마을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관이 원경과 근경이라는 관점에서 정해지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정하는 문제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을 한옥마을로 조성하고자 할 때는 땅이 생겨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땅을 찾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이나 교육·편의 시설에서의 접근성도 한옥마을이 현대적 거주성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서 한옥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주차와 도로에 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한옥마을을 계획하다 보면 매우 침예하게 의견이 부딪치곤 하는데, 전통적인 한옥마을의 경우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자동차가 한옥마을에 있는 모습은 웬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져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의 한옥들도 단독주택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필수적 도구인 자동차를 무작정 제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일상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응급차나 소방차를 위한 접근까지도 현대적 거주성의 범주에 넣는다면 매우 세심한 설계기법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통 한옥마을에서 경험한 가로경관에서 도로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마사토의 재질과 색깔의 것이 깔려 있는데, 이 역시 현대적 거주성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도로포장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셋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옥의 형태적 개방성이나 가로에서의 낮은 담장 등을 고려하면, 한옥마을의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없이는 현대적 거주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에 대한 안전성도 마찬가지이다. 한옥마을의 경우 주로 목재로 조성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집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안전하게 방재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넷째는 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에 대한 문제이다. 한옥마을을 집합적으로 조성할 때는 개별 한옥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들이 배치되는데, 이들 한옥마을에 조성되는 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은 일반 단독주택지에 조성되는 방식과는 다른 형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단독주택지에서는 경관적으로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가로등·배전반·보도페이빙·소화전 등이 한옥마을에 조성되었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많다. 한옥마을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한옥마을의 공간배치 형태와 배치질서를 살리면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적당히 구불구불한 좁은 고샅길이나 마을마당·정자·마을숲과 같은 전통적인 계획요소들을 접목하면서 현대적 거주성을 확보하는 계획기법이 절실하다. 전통적인 한옥마을은 현대적 단

독주택지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한옥마을들을 보면, 현대식 바둑판 모양의 택지개발형 단독주택지에 한옥을 끼워넣는 매우 기괴한 형태의 모습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적 거주성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적용한 한옥마을의 계획기법이 필요하다.

맺음말

한옥을 현대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 정도가 흘렀다. 그 이전까지 한옥은 보전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그런 한옥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개별한옥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집합적으로 한옥이 밀집해 있는 한옥마을이 가지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주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의 골목과 마당에서 느끼는 전통공간에 대한 향수의 영향도 크다. 이는 한옥마을이 현대적 거주성을 가지고 재탄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옥마을이 현대적 거주성을 가지고 새롭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앞서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노력 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성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다. 한옥마을의 문제는 물리적 계획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업성,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편의성, 같이 사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현대적 거주성이 발휘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 한 채 한 채의 한옥을 조성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였을 때 사회적·기술적·문화적 파급 효과는 각각의 개별 한옥이 지어지는 것 이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활성화 정책의 끝은 아마 성공적인 한옥마을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현대적 거주성을 살린 멋진 한옥마을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건축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역정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동도서기’라는 윤리

오늘날 한옥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옥거리가 늘어나고 한옥마을이 생겨나는 호뭇함에 가슴이 벅찬 사람도, 전통구법이 대체되고 현대기술이 침범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모두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 위대한 한(韓)민족의 혼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원은 적어도 두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이념이다.

19세기 후반 ‘동도서기’의 발상은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 공통의 대응전략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으로,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로 부르는 말이 각각 달랐지만, 주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공고히 하면서 서양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자는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서구 근대사상과 과학문명이 실제로는 한 덩어리였던 것을 애써 무시하고자 한 방어적 기제로써 온건한 개화파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동도서기’는 서양이라는 거대한 이질성을 인식하고 난 다음의 반응이었다. 한국건축사에서 이러한 이질성은 먼저 중국건축을 통해 다가왔다.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다른 건축을 접한 서울 지역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가옥이 옆 나라의 가옥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원래 가옥(家屋)이라는 말은 형태나 양식과는 무관하여 국경이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청나라의 경험은 가옥을 중국식[華制]과 한국식[東制]으로 구별하는 인식을 만들어냈고, 단단하고 실용적인 중국식 건축은 누가 봐도 앞선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건축 동도서기는 탄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矩, 1764~1845)가 건축 등에 관한 백과사전을 집필하면서 시작한 말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섬용지(贍用誌)」는 13개의 목차로 구성하였으나 하나라도 한숨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첫머리에 나오는 건물 짓는 법과 재료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선각자들은 한국건축의 문제점과 폐해를 정리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예를 들어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은 한국의 온돌 만드는 법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서유구는 이에 여섯 가지 폐해를 더하였다.

나아가 풍석은 우리나라 건축물 배치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중국건축처럼 一자형 건물이 아니라 ‘口자 같거나 日자처럼 되기도 하고 혹은 丿자 둘이 마주하는 것처럼’ 놓인 한옥은 무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지세를 따라야’ 하였고, 온돌의 경우도 ‘오래도록 방에서 살아와서 지금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흐르는 기와[溝瓦]를 사용한다거나 온돌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결과적으로 풍석은 한옥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벽돌이나 기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택개량안을 구상하였다. 중국의 기술은 한옥의 바깥을 감싸거나 온돌의 높이를 쉽게 맞추는 정도에서 한옥에 적용되었고, 19세기 중반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된 석파정(石坡亭) 사랑채에서 볼 수 있는 절충주의 건축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해법은 건축 동도서기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좋은 기술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개량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유구 저, 정명현·이동인·이강민·김태완·최시남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2016, 섬용지 서문

** 이강민, “서유구의 건축론과 현대적 활용성”, 「풍석 서유구 탄생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14.5.9.



석파정 사랑채 (19세기 중반)

정반대의 시도들

한국건축사에서는 정반대의 시도들도 발견된다. 서양의 사상을 한국의 그릇에 담아 보려는 발상은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실천되었다. 한옥 교회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꾸준히 지어졌다. 한옥 교회는 한국건축의 평면을 90도 회전시켜 박공면을 입구로 하고, 실내 기둥을 지붕 위로 높여 바실리카 공간을 재현하였다. 이에 십자가와 종탑을 추가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건축유형을 완성시켰지만, 익공이나 창호 등 목구조 세부, 단청이라든지 기와의 색상은 매우 익숙한 우리 전통이었다.

1900년에 지어진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도동기’의 가장 솔직한 사례일 것이다. 전체 건축과정을 지휘한 트롤로프 신부(Mark Napier Trollope, 1862~1930)는 처음에 한옥 임시공소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기금이 모일 때마다 직접 자재를 구입하였는데, 도리·장여·인방·창방 등 정밀한 부재 명칭과 단위를 기록한 문서들이 남아 있다. 트롤로프는 건축가이던 아버지의 영향과 탁월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한옥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할 수 있었으며, 초기 기독교 건축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스스로 토속건축으로부터 고급건축양식을 발전 시키기를 바랐다.*

* 강영지·우동선,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 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의 건립 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2, no.06, 2016.



성공회 강화 성당 (트롤로프, 1900)

그러나 강영지·우동선(2016)의 연구는 ‘트롤로프 신부가 보여준 건축 과정에서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성공회 전례(典禮)의 온전한 구현은 사실상 건축물의 부분을 형성하는 작은 기물들에서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제단과 성수대는 중국인 석수에게 제작을 맡겼고, 커튼과 벽걸이 등은 영국인 수녀가 지휘하였으며, 장식쇠·자물쇠·손잡이와 단풍나무 목재 등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였다. 특히 아치형 출입문 4개는 온전하게 영국산 목재와 철물로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적인 위생과 환경 개념, 근대적인 가족 개념을 습득한 건축가들이 한옥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또한 유사한 사례이다. 건축가들은 당시 ‘문화주택’이라 부르던 서구식 주택평면을 염두에 두고 재래식 한옥의 개량안을 모색하였다.* 중정을 둘러 건물이 배치되는 재래식 한옥은 채광·통풍·위생에 불리하기 때문에 실들이 가운데로 모이고 주변에 공지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한옥이 개량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형 평면은 현관과 복도를 이용해서 집 안의 동선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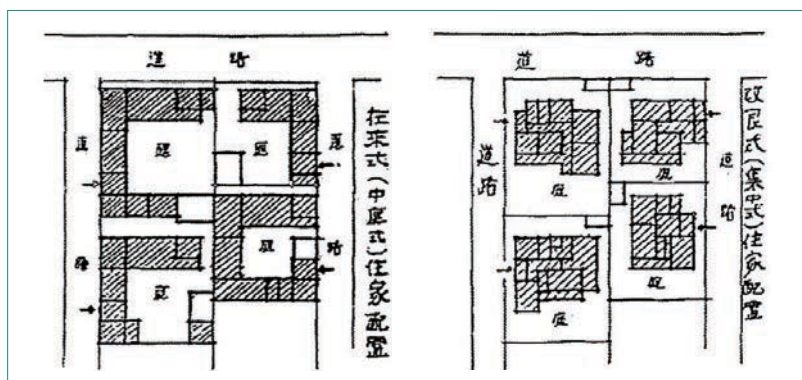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트롤로프 신부는 다음의 건축 작업인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한옥의 기법을 포기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을 채택하였다. 서울의 한옥 주택은 1960년대의 마지막

* 박용환,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pp.35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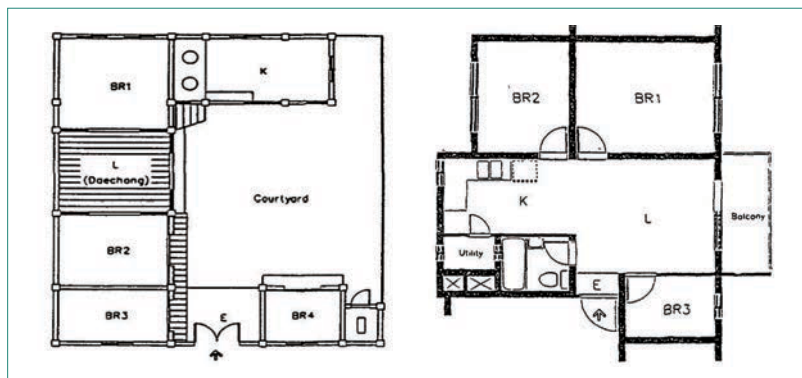
순간까지 중정형 배치가 흔들린 적이 없으며, 집중형 평면은 ‘양옥’에만 적용되었다. 한국의 목조기술은 처음부터 열악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개량을 통해 서구의 석조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된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한옥의 기법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임시적인 것, 서민적인 것, 중도적인 것으로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다.

동도서기의 성취

기술이나 형식과는 달리 관습이나 세계관은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민족 정체성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신을 우선시하는 ‘동도서기’의 기치는 빛을 잃을 수 없었다. 급속하게 서구화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어떻게든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한국 현대건축사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성



재래식(중정형)과 개량식(집중형) 평면배치 (박길룡, 1933)



도시한옥과 아파트의 평면 비교 (최재필, 1992)

립시켰다. 다만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취되었고, 어떤 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건축 동도서기의 자연스러운 성취는 주택에서 이루어졌다. 따뜻한 바닥에다 신을 벗고 생활하는 한국인의 생활양식은 소파·식탁·침대·양변기 등 입식생활의 요소들이 완전히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의 모든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은 아파트에서 거실중심형의 평면으로 되살아났다.* 한국의 주택은 가장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로 지어지지만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공간구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다.

종종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한 사건은 한국정신의 상징으로서 한옥의 외관을 현대건축에 덧씌우는 일이었다. 한동안 유행한 콘크리트 한옥은 건축의 전통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여긴 사례이다. 그러나 1960년대의 국립종합박물관으로부터 1980년대의 독립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콘크리트 한옥은 건축가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 곡선의 기와지붕과 배흘림기둥이 한국정신을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태에는 감추고 싶은 역사의 부끄러움이 함께 붙어 있어서 보기에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정신은 형태가 아닌 무형의 것으로 투영되어야 하였다. 단정한 삶의 태도, 자연과 조화하려는 노력,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등은 추상화된 ‘공간’에 대응하였다. 한옥 건축의 정신은 형태와 질감이 배



독립기념관 (김기웅, 1987)



수원박물관 (송효상, 1992) 현관부

제된 공간들의 관계로 간주되었다. 건축가들은 철저하게 서양의 언어와 문법으로 한옥 공간을 번역하였다. 형태가 공간으로 치환되면서 비로소 건축 동도서기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절정과 역전

1992년 승효상이 설계한 ‘수출당’은 1980년대 이래 우리 건축계의 한국성 추구의 한 단계를 완결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옥의 공간관계는 콘크리트로 새 생명을 얻었다. 숭고한 한국정신과 국제적 건축기법이 결합하여 20세기 한국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주택작품이 탄생하였다. 수출당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ㄷ자로 둘러싸는 도시한옥의 공간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었고, 부엌 옆의 뒷마당과 문방 뒤의 흙마당은 현대 설계기법이 아니었으면 이 규모의 주택에서 구현될 수 없는 전통 공간이었다.

그런데 수출당에는 기막힌 반전이 있다. 집주인인 미술평론가 유홍준이 젊은 건축가 승효상에게 요청한 것은 바로 ‘서도동기’였다는 점이다. 유홍준은 ‘생활하는 것은 아파트 구조의 편리함, 분위기는 한옥의 아늑함을 합성’하도록 정확하게 ‘서도동기’라는 용어를 써서 주택설계를 의뢰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에서 청빈의 사상에 주목하였고, 이를 ‘빈자의 미학’으로 발전시킨 승효상이 마침내 완성한 ‘동도서기’는 정반대의 이상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

유홍준이 ‘동도서기’를 폐기하고 ‘서도동기’를 생각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0년 동양의 문화사에서 이 주장은 별스러운 성과도 없으면서 그 이상만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실천적 추진력은 이미 상실할 정도로 우리는 서구화되었고 모더니즘화되어 버렸다.” 즉 100년 동안 도(道)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축으로 삼는 것은 현대와 모더니즘으로 하고, 거기에 잃어가는 동양의 정신과 전통의 가치를 살려 보는 길’을 모색한 것이 유홍준의 ‘서도동기론’의 요체이다.

* Jaepil Choi,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Prospects on Housing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대한주택공사, 1992.

** 유홍준,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학동 수출당기”, 『월간 건축문화』, no.146, 1993-07, p.113.

이처럼 주인 행세를 해야 할 한국정신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더 이상 고유하고 독자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많은 건축가들이 영감을 받았던 선비정신은 이제 서구 프로테스탄티즘의 변주로 받아들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닮았다. 올바른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동서양의 구분은 경계가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윤리는 여전히 강고하고, 이에 따라 동양의 그릇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옥현상의 위치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대두된 한옥에 대한 높은 수요와 그에 따른 민·관의 대응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는 ‘한옥현상*’은 건축 동도서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옥현상은 1970년대 이후 전통 논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성 모색의 과정을 잇고 있는 듯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건축·사회·정책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해 한옥을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를 낳은 듯 보인다. 국가의 예산으로 한옥 설계를 수감한 건축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지자체의 꽤 많은 지원금은 도시와 농촌의 풍경을 바꾸었다.

21세기 한옥현상의 추동력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건축의 발전과정에서 전통과 민족의식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두 세기 전의 맥락을 잇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대상이 모르는 사이에 역전되었다. 즉 한옥현상은 동도서기의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서도동기의 실천으로 요약된다. 유사 이래 가장 서구적인 국민들이 가장 한국적인 건물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재료·형태·문양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건축 동도서기의 역정은 동과 서, 도와 기의 상호 치환을 보여준다. 한옥의 공간, 형태, 재료는 정신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면서 현대 한국건축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조합들은 위대한 해법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고, 다음 국면으로 과업을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릇의 관계에도 의구심이 생겨났다. 건축이 정신과 그릇으로, 또는 본질과 기능으로, 혹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 이강민, “특집: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ol.60, no.08, 2016.08, pp.20-23.

물을 옮겨 담듯이 세계관과 행동을 서로 다른 공간과 재료에 이식할 수 있다는 사고는 제국주의적인 근대정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신이 마치 DNA처럼 건축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건축의 부분을 떼어다 옮기면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던 것이 한 가지 국면이라면, 정신이 본질이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도 좋다는 것은 또 다른 국면이었다. 이러한 태도들은 최근 한옥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한옥건축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이루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옥현상에 거는 희망은 그것이 한옥의 온전한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옥현상은 세속적 형태나 추상적인 공간을 분리해내지 않고 한옥을 짓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 동도서기의 역정이 공통적으로 한옥의 내용과 형식을 분해한 뒤 취사선택하는 것을 관습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 또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 이를 극복한다면, 최근의 한옥현상은 한국건축의 미래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영지·우동선(2016),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 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의 건립 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2, no.06.
- 2 박용환(2010), 「한국근대주거론」, 기문당, 2010.
- 3 서유구 저, 정명현·이동인·이강민·김태완·최시남 역(2016),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 4 유홍준(1993),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학동 수졸당기", 「월간 건축문화」 7월호, no.146.
- 5 이강민(2014), "서유구의 건축론과 현대적 활용성", 「풍석 서유구 탄생 2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6 이강민(2016), "특집: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vol.60, no.08. 대한건축학회.
- 7 Jaepil Choi(1992),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lan of Modern Apartment House in Korea, *Prospects on Housing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21st Century*, 대한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한옥을 보급하고 보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옥 교육과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고유한 문화자산이자 친환경 주거인 한옥의 미래 가치를 키워 나가고자 한다.

한옥 진흥의 바탕을 만든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의 후속조치로 2010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국가한옥센터가 설립되었고, 2015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센터로 지정되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정책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다.

과거를 품고 미래를 향하는

한옥의 가치를 발굴하다

한옥은 현재에도 건축되고 있는 유효한 건축물인 동시에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형·개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옥의 고유성’에 대한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건축기준’이나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등 현대생활의 편의와 함께 고유한 건축문화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현재와 미래에 지어질 한옥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또한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 발굴과 한옥 유지·관리 점검기준 연구 등을 통해 기존 한옥의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현대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성과(2015~2016)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원(2015)
- 한옥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마련 지원(2015)
-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 배포(2015)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2016)
-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2016)
- 서울 우수 한옥·한옥인 인증제 공동 수립 및 시행(2016)
- 경주 지진피해 한옥 현장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2016)



2016년 제1차 한옥포럼



2016년 지자체 한옥담당 공무원 워크숍



한옥에 대한 교양 프로그램 인터뷰



드론을 활용한 한옥밀집지역 경관 기록 결과



드론을 활용한 한옥 촬영



국가한옥센터 회의 모습

한옥산업 현대화와 한옥 보급·확산 기지

웰빙·친환경 주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옥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한옥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 산업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옥이 연간 평균 1,500여 채 지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한옥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 보급·확산을 주장할 수만은 없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사업체 실태조사, 대국민 한옥 인식 수요특성 조사, 한옥 건축공사 전 과정 기록사업, 한옥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한옥산업 발전과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옥통계 체계화를 통한 관련 정책의 과학적·합리적 기반 마련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부터 한옥자산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모두 약 5만 채의 한옥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 한옥 수 추정과 한옥 인·허가 현황 등 한옥 건축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한옥 DB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한옥 밀집지역 도출, 용도지역지구와의 중첩 분석 등 과학적·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한옥통계 체계화를 통해 격년으로 「한옥통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옥정책·정보의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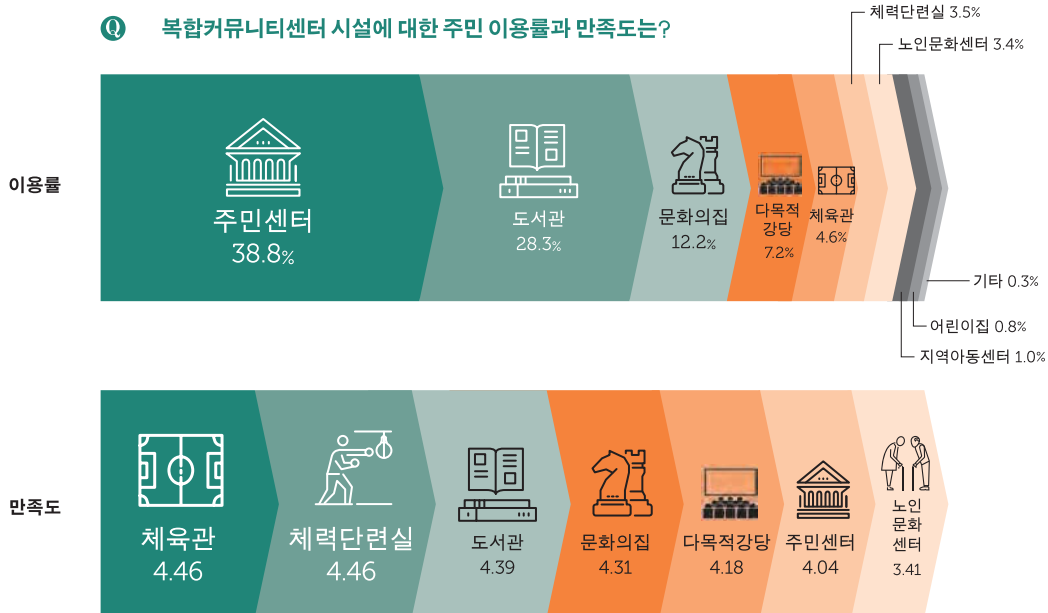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한옥포럼을 2회에서 4회 열어 왔으며,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현장밀착형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역 기반 한옥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옥정책브리프와 단행본을 꾸준히 발간하는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국가한옥센터의 모든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한옥포털사이트(<http://www.hanokdb.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옥 정책·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이 조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사용 후 평가 및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조성될 10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성방안과 추진전략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약 30일간 수행되었다. 이용자 사용 후 평가는 주민센터 이외의 시설을 1곳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 5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요조사는 이용자 사용 후 평가 대상 주민 531명과 주민센터만
이용하였거나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주민 229명을 포함하여 전체 76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❶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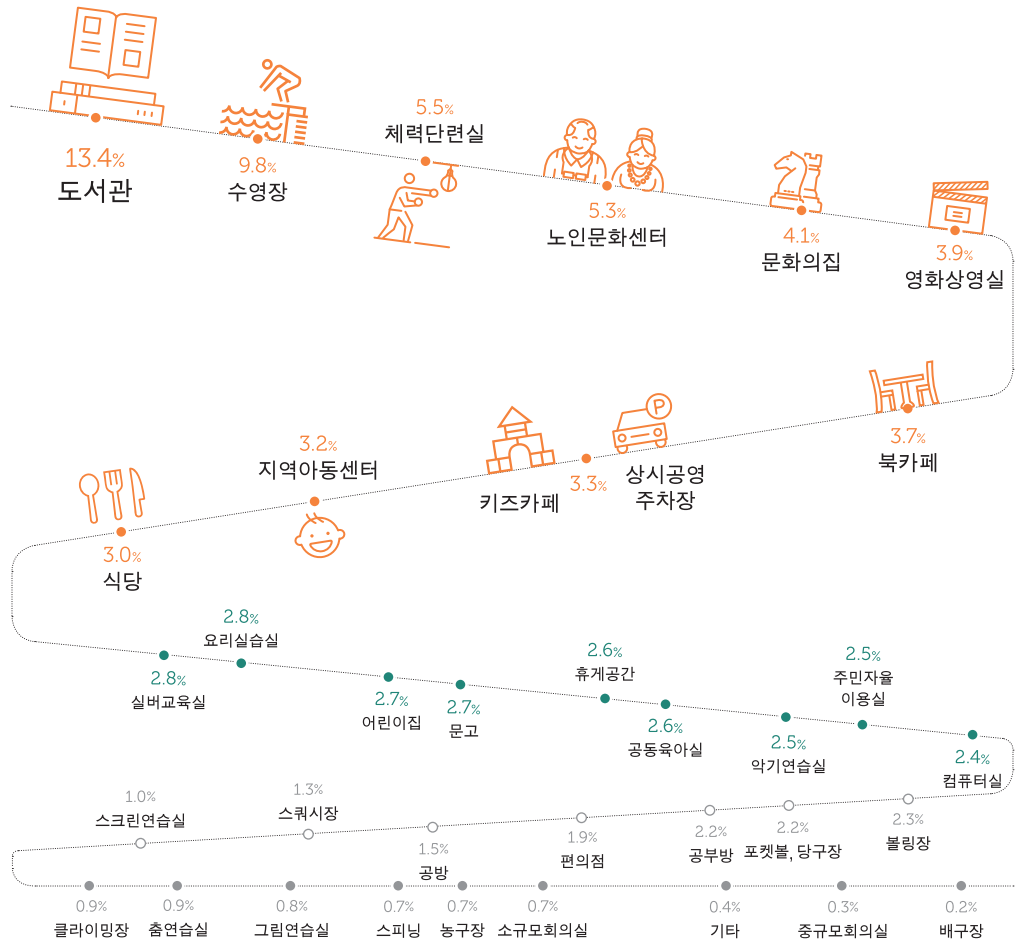


❷ 주민센터와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고, 시설 만족도가 높은 편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주민센터(38.8%)와 도서관(28.3%)이었으며, 문화의집(12.2%)과 문화의집에 속한 다목적강당(7.2%)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의 시설은 이용률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 이용이 특정 시설에 편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시설 만족도는 평균 4.17로 높았다. 체육관과 체력단련실(4.46), 도서관(4.39), 문화의집(4.31)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용률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은 시설은 주민센터, 평균 이하 점수에 해당하는 시설은 노인문화센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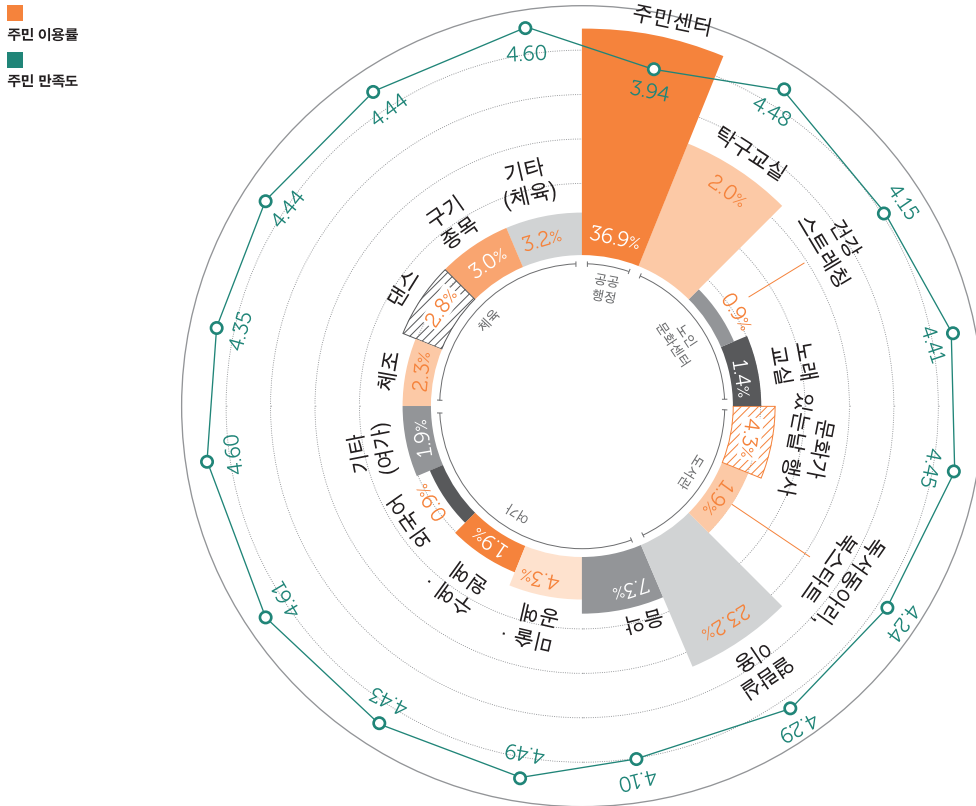
Q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A 도서관·수영장·체력단련장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일부 수익형 휴게시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도서관(13.4%)과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 수영장(9.8%)으로 나타났다. 2.5% 이상의 소수의견을 살펴보면 북카페(3.7%), 키즈카페(3.3%), 식당(3.0%) 등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익형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오전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까지 느긋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Q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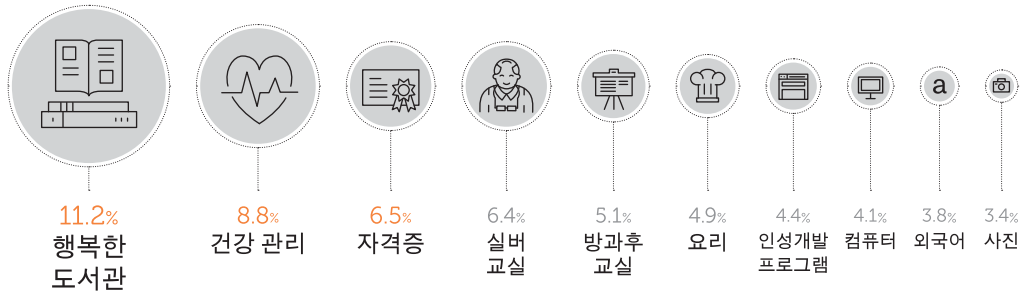


A 공공행정과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는 고르게 높으나 공공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의 공공행정이며, 다음은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이용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중 유일하게 주중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하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4.37점으로 높았으며, 그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의 공공행정(3.9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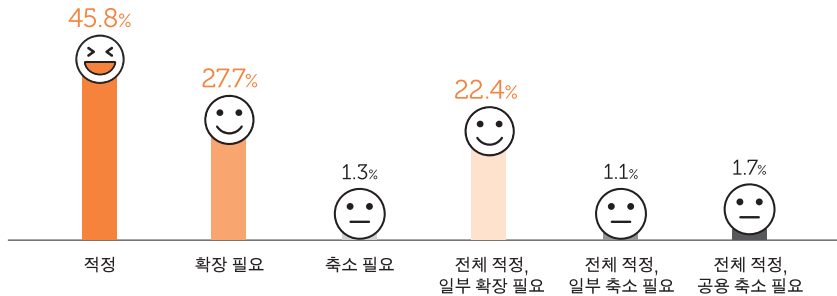
Q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A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요가 가장 높고, 단순 여가보다 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높은 편

행복한 도서관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건강관리(8.8%), 자격증(6.5%) 순으로 따랐다. 조사한 35개 프로그램 중 13개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53.6%로 단순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소수지만 창업 지원(1.8%)과 멘토링(1.2%) 같은 부문의 수요도 확인되었다. 이는 평균 연령 31.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복합커뮤니티센터 규모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A 대체로 적정하나, 일부 확장이 필요

대체로 적정하다(45.8%)고 보아 주민들은 시설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27.7%)과 일부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22.4%)도 다소 있어,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에서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의 면적을 여유롭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복도는 넓은데 프로그램 교실은 너무 작다”, “도서관이 너무 작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24

Winter 2016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사회의 합의들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미술관 건축 붐과 이와 관련해 중국 건축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정책과 실제 사례에서 국내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경주 지진 이후 국내에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전 세계적인 논의거리인 빈집 문제에 대한 국내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짚어본다.

해외

건축·도시 관련
국제적 합의와 과제
054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060

상인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064

국내

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069

빈집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073

건축 도시 동향



UEC의 포탈인 구조와 인공에 위치한 내부공간



시카고 리버워크

건축·도시 관련
국제적 합의와 과제
054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060

상인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064

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069

빈집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073

건축·도시 관련 국제적 합의와 과제 |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전후 평화 구축에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 20여 년 전 세계 미술계에 등장한 중국은 분포의 불균형과 관리 능력 부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맞서 출현한 민영 미술관들은 공공 미술관이 보여주는 당대 예술 방법의 부족을 보충하고 소규모 미술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중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의 여러 설계사무소들에게도 건축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상인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 Better Bankside는 철결·관리·안전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사업 이외에 경제적 부분에서 마케팅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자 전체를 위한 장소로서 공공공간 개선사업과 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정책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지진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진에 대한 제도는 지진 발생 추이와 더불어 제반 여건이 충족됨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

빈집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 빈집 정비 정책은 포괄적 주택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빈집의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나 주택 멸실 물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신규 주택의 수요를 초과한 공급물량이 지속되는 한 빈집의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택 정책 아래 빈집 정비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 관련 국제적 합의와 과제

SDG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현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최근 유엔회원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의 후속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수립하였다. 2015년 9월 17개 SDG와 169개 세부목표에 합의하고, 2016년 3월에는 230개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향후 15년간 국제개발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MDG가 사회적 측면에 치중한 반면 SDG의 경우 지속가능한 환경 및 도시공간 구축을 주요 개발의제(SDG 11)로 선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밖에도 SDG에서는 물 관련(SDG 6),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SDG 7),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SDG 9), 기후변화 대응(SDG 13) 등 도시·건축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부 분야들이 함께 선정되었다.

협약 과정에 있어서도 SDG는 MDG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MDG는 일부 선진국이 논의를 주도한 결과 당시 개도국의 저개발 문제 및 일방적인 선진국의 개도국 개발 지원에 한정되었다.

그에 반해 SDG 선정 과정에는 전 유엔회원국(193개국)이 투명하게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고, 시민사회·지방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지구적(universal)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이행해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이행 과정에서도 좀 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광범위한 목표를 이행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 흐름은 지난 60년간 세 번에 걸쳐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콘퍼

MDG와 SDG 비교

구분	MDG(8개)	SDG(17개)
사회분야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에이즈 등 질병 퇴치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4.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3. 보건 증진
지속가능환경분야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세부목표로 슬럼지역 반감)	6.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경제분야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 회복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업화 확대 10. 국가 간 및 국내 불평등 해소
협력분야	8.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굵은 글씨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목표를 의미함

런스에도 반영되어 있다. 1976년 밴쿠버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슬럼문제와 주거 공급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각국의 중앙 정부가 논의의 주체였다.

이어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해비타트Ⅱ’에서는 1992년 리우선언*에 기반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거권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때부터는 지방 정부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해비타트Ⅱ는 도시와 환경이 대척점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개발의 일부라는 인식을 널리 확대하고, 슬럼지역 개선이라는 목표를 MDG의 세부 목표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에서 열린 ‘해비타트Ⅲ’에서는 167개국이 모여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은 “새로운 도

시의제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최초의 도시 의제”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해비타트Ⅲ에서는 지방 정부, 즉 ‘도시의 역할의 중요성’, ‘평등과 권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주요하게 논의하였다. 그중에서도 ‘도시권(right to the city)**’이 합의문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의 ‘공공성’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합의문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7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0개국이 서명하였다.

** 도시를 사유화하고,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난민 배제,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공공성을 되찾자는 취지로 해비타트Ⅲ 논의 초반에 시민사회가 주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와 다른 인권 관련 용어와의 혼동 등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하는 회원국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제 초안에서는 도시권이 강력하게 제시되었으나, 합의안에서는 한 번만 언급되며 전반적인 어조가 완화되는 등 기존의 취지는 퇴색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기후 변화협약도 건축·도시 관련 주요 의제로 들 수 있다. 회의 당시 190여 명의 국가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유례없이 높은 관심도를 얻어 화제를 모았다. 이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각국은 선진국으로 제한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전 당사국인 195개국 모두의 의무로 확대하고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보다 낮게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이행방안 및 목표치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를 제출하고 5년마다 이를 평가·검토하도록 하여 각국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당사국들이 건축물과 교통 분야 관련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주요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녹색 건축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건축·도시 관련 이니셔티브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행 주체 및 향후 계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는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추구한다. 즉 SD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일부 선진국의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각국의 주체적인 정책 실현 및 독립적인 자원 활용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SDG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행 로드맵이다. 그러나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시 체계와 국제기금을 통한 일정 정도의 개도국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2015년 SDG 합의 이후 다양한 평가 및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유엔 회원국 간 회의체 중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내 고위급회의체(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가 SDG 평가 및 검토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총 17개 SDG를 주제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검토한 후 4년 주기로 총체적인 평가 및 검토가 이루어진다. SDG 11을 비롯한 건축·도시 관련 SDG는 2018년 고위급회의체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엔은 각 회원국이 SDG 이행에 관한 자발적인 국가 검토 보고서(Natural Voluntary Reviews: NVRs)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SDG 이행 평가와 검토를 위한 기본 보고서이자 각국 간에 성공 사례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엔 사무국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내에서는 통계과가 지표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통계위원회에서는 기관 간 SDG 지표반(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을 결성하여 사무국 외부의 의견과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SDG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

* 한국 정부가 제출한 INDC 역시 녹색건축물,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확대,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혜택 등을 홍보하며 건축 및 교통을 주요 감축 분야로 언급하고 있다.

** 2017년에는 빈곤 퇴치 및 번영 추구(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2018년에는 지속가능하고 회복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화(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2019년에는 평등 및 포용성 추구(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를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은 2016년에 NVRs를 제출하였고, 2014년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해비타트III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 2015년 통계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결성하였다.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이러한 지표 평가에 기반하여 작성된다.

2016년 3월 제47회 통계위원회에서 230개에 달하는 SDG 지표를 진통 끝에 선정하였고, 앞으로 매년 각국의 통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통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지표들 중 건축·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슬럼 지역 거주자 비율, 대중교통 접근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공기오염도, 도시 공공 녹지 비율, 폐기물 처리 등 15개의 지표가 SDG 11의 주요 지표로 선정되어 있으며 담당 기관으로는 유엔 해비타트와 WHO·UNEP 등이 있다.

한편 ‘새로운 도시 의제’를 내건 유엔 해비타트는 사실상 건축·도시 관련 의제 검토와 평가를 주도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SDG 13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을 주도한 UNFCCC와 달리 유엔 해비타트는 의제 평가 및 검토에 대한 독보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향후 20년 동안 논의될 이 의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며, 이행을 위한 자원 활용이나 검토 방식은 SDG의 전반적인 평가 및 검토 체계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엔 해비타트는 이 의제에 대하여 향후 4년 주기로 이행 진행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고위급 회의체에 제출되어 다른 SDG와 함께 총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많은 건축·도시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슬럼 개선’에 한정되었던 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이 2015년 SDG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특히 SDG 11 세부 목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에 논의되었던 주거 문제에서 더 나아가 도시 내 문화유산 보존, 도시안

전 개선, 공원 등 어메니티 확보 등 도시 문제를 다면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DG 11 이외에 분야별 SDG들 또한 입체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SDG 6인 물 문제는 SDG 11에서 추구하는 주거 수준 개선 및 기본적인 공공 시스템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SDG의 통합적인 구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라는 공간을 개발 의제 전면에서 세우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대결구도 때문이었다. 개도국들 중 대부분은 농촌 개발이 주요 경제개발목표였고, 도시 문제는 주로 선진국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인구인 만큼 도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속가능개발의 주요한 축으로 판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SDG 11의 세부 목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도심, 근교 지역, 농촌 지역 간의 상생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역 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도시라는 공간을 문제 해결 대상으로 보는 데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제 협력이 국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앞으로는 도시 정부와 각종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 집중적인 논의에서는 놓치기 쉬운 각 도시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유엔 해비타트의 이행권한 논의 당시 케냐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COP21의 UNFCCC처럼 유엔 해비타트가 도시 문제 관련 평가 및 검토를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포함한 유엔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이양 받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선진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017년 72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와 국제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향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15개의 관련 지표들이 과연 SDG 11에서 논의하고 있는 도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지표들의 비교가능한 데이터 구축 및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SDG 11을 비롯한 건축·도시 관련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의제의 경우 전반적인 SDG 평가와 검토 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SDG 합의 후 해비타트Ⅲ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졌다. 유엔 해비타트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발 분야에서 도시의 역할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의제 이행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비타트Ⅲ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의 성공의 한 척도로 각국과 기관들의 고위급 참석률을 들 수 있다. 국제적 합의안이 법률적 효력이 없더라도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서로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특정 의제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해비타트Ⅲ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참석한 국가 수장은 에콰도르를 포함하여 3명이 전부였고, 기관장들도 총 3명에 불과하였다. 도시 의제 이행에 대한 공약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비정부기관들이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일한 도시화 전략인 ‘새로운 도시 의제’는 내용 면에 있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복잡다단한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논의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evidence-based)하여야 하지만 본 의제는 매우 단정적이고 선언적으로 도시 개발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한 협



2015년 유엔총회 당시 17개 SDG를 조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뉴욕 유엔 본부

* 국제회의의 개최 시 ‘이행공약 계획(Implementation Plan 또는 Voluntary Commitment)’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해당 국가나 기관의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COP21 파리협정의 경우 INDC를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번 해비타트Ⅲ에서는 총 61개 제출안을 대부분은 비정부기관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눈에 띄는 것은 독일의 22개 개도국의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에 10억 유로를 기부하겠다는 공약이 거의 유일했다(Transformative Urban Mobility Initiative, http://habitat3.org/wp-content/uploads/commit_files/Ud2KpFS2rNRNbGfTkX.pdf 참조).

상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평가가능한 메커니즘이나 이행을 위한 재정 수단 등이 최종합의문에서 삭제되었으며, COP21 파리협정 등 다른 협의문들과의 연결고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 의제 이행 전략은 SDG 이행 체계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SDG에서는 도시 관계자들, 즉 지방 정부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우선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새로운 도시 의제의 방향과 배치되는 만큼 앞으로 도시들이 SDG 이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가며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전후 평화 구축에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논의하여 왔다. 또한 일방적이고 분야별로 단절되었던 접근법의 한계를 깨닫고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목표 아래서 서로 다른 분야들 간의 통합적 접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포괄적 참여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선진국 대 후진국, 도시 대 농촌, 개발 대 보존 등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적 도시 문제 관련 논의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과거의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 공급 등 물리적인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삶의 질을 논하는 수준까지 진일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우 주어진 체계 안에서 수동적으로 논의를 따라가기보다는 SDG 및 평가 지표, 관련 이니셔티브, 나아가 국제기구들 간의 거버넌스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도시

개발 경험을 홍보하고 선진적인 도시 정책을 시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DG 및 도시 의제와 관련하여 다층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다양한 기관들도 주체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유엔 SDG 11 관련 파트너십 홈페이지(<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s/goal11/>)

참고문헌

- Habitat III Secretariat, "New Urban Agenda: Draft outcome document for adoption in Quito, October 2016", UN Habitat, 2016,9,10.
- Jacqueline M. Klopp and Danielle Petretta, "Can we actually agree on indicators to measure urban development?", *Citiscopes*, 2016,9,19. (<http://citiscopes.org/habitatIII/commentary/2016/09/>)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015,3,20.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National Voluntary Review*, New York, 2016.
- United Nations,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10,21.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Lang=E)
- United Nations, Resolution 70/299: "Follow 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 2015,12,30.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299&Lang=E)
- United Nations, Resolution 70/473: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and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2016,2,17.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473&Lang=E)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ritical milestones towards coherent, efficient and inclusive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16,1,15.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70/684&Lang=E)
-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UN DESA Publication, New York, 2016.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2015,6,30.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Published%20Documents/Republic%20of%20Korea/1/INDC%20Submission%20by%20the%20Republic%20of%20Korea%20on%20June%2030.pdf>)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황문호
칭화대학 건축학원
박사과정

중국 미술시장의 팽창과 미술관의 증가

2016년 3월 1일 파리에서 발표된 ‘아트 프라이스 (Artprice)’와 AMMA(Art Market Monitor of ARTRON)의 ‘2015 세계 예술시장 연간 보고서 (Global Art Market Annual Report)*’에서 그동안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온 중국이 뉴욕에 정상의 자리를 넘겨준다.

20여 년 전 세계 미술계에 등장한**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막대한 부의 축적을 앞세워 2010년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미술품들을 사들여 왔다. 소장 작품 수의 증가와 사회 공공의 요구로 자연스레 미술관 건설과 전시에 필요한 공간도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의 박물관 연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전국 박물관의 수는 4,510개로 전년 대비 345개 증가하였다. 그중 국유 박물관은 3,528개(국가문물 부문 소속 2,798개)이고 비국유 박물관은 982개인데, 비국유 박물관은 171개 관이 늘어 국유 박물관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박물관의 소장 내용과 성격으로 구분하면 종합성 박물관이 1,743개, 역사 기념류가 1,840개, 예술류가 411개다. 예술류는 전체 비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율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http://imgpublic.artprice.com/pdf/rama2016_en.pdf

** 중국 미술계에서는 14명의 예술가가 제4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정식으로 참가한 1993년을 그 기점으로 삼는다.

*** 예술시장의 과열이 가장 심했던 2011년 중국 예술품 시장의 교역 총액은 2,108억 위안(약 35조 9,000억 원)에 이르렀다. 연 증가는 24%에 달하였다.

**** 중국 문물 정보망(<http://www.ccrnews.com.cn/index.php/Xinwenzixun/content/id/>)

중국 미술관 건축의 현황과 문제점

분포의 불균형과 관리 능력의 부족

20세기를 전후하여 서구의 정치·경제·문화가 도입될 때 ‘서양경(西洋景)’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의 개념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중국 최초의 미술관은 1936년 국민당 정부 시절 수도 난징에 설립한 국립미술진열관(현 장수썩미술관의 전신)이다. 하지만 이후 1960년대 초 중국미술관과 상하이미술관이 설립되는 것 외에 1980년대 전후 현대 예술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술관 건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술시장의 확대와 도시계획에서 미술관이 문화의 지표로 작용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많은 자금을 미술관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당 인구 비례*에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베이징·상하이·광둥 등 대도시와 빠른 발전을 보이는 동부 연안에 위치하여 분포 역시 극

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미술관 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규모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데다 경험도 부족하여 관리 능력이 받쳐 주지 못하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보관 창고나 전문 유지 인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예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작품들은 개인 부호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몇몇 대도시의 중요 미술관에서만 소장 구입이 진행되고 있다.

* 2013년 통계 자료에서 중국 자국민 40만 명이 한 박물관을 차지하는 비율

** 공공 미술관의 소장물품(2013)은 20여 만 건으로 중국 미술관에서 그 절반인 10만 건을 소장하고, 성급 미술관 중에서는 장쑤성 미술관이 1만 3,0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다. 그 밖에 많은 지방 미술관들에 예술 소장품이 없는 것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에 완공된 장수썩미술관 신관

자료: www.archdaily.cn/cn/601200/nanjing-art-museum-slash-ksp-jurgen-engel-architekten/50089f6628ba0d50da0013dc-nanjing-art-museum-ksp-jurgen-engel-architekten-image

©ksp jurgen engel architekten

규모 경쟁과 전문성·경험 부족

미술관 건설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요구하는 ‘가오다상(高大上)’이다. 이는 고급스러움(高端), 당당함(大气), 품위 있음(上档次)을 의미하는 축약어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이다. 정부 계획자들은 국제 유명 건축가를 초대하여 설계하고, 서로 그 규모를 비교하며 지어지는 속도를 자랑한다. 각 성의 성회에서 최근에 건설된 것이나 건설 계획 중에 있는 미술관들은 대부분 면적이 4만m²를 넘는다. 중국 국가미술관 신관도 13만m²의 면적으로 계획되었다. 정부 계획자들에게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미술관은 도시 품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건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 건설 설계나 건설 단계에서 미술관의 기능에 대한 바른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전문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건축설계사들이 이전 작업 중 미술관 방면에 대한 설계 경험이 거의 없다. 더욱이 미술관 건축 표준 규범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그들에게 미술관 업무기능을 명확하게 요구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완공 후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가 부족한 데다 예술창작품에 대한 설계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박물관 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명이나 전람관의 층고, 전람 유통선에까지 불합리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시 중심의 변화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근교의 신개발지역을 일명 문화·예술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말이 아닌 평일의 미술관람자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민영 미술관의 도약

중국의 미술관과 현대 예술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



© Su Shengliang

롱 미술관

자료: <http://www.archdaily.cn/cn/778009/long-mei-zhu-guan-xi-an-guan-da-she-jian-zhu>

가와 그 작품을 소장하는 수집가의 스토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1985년을 전후하여 예술 영역에서 사상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85사조(思潮)’라 불리는 이 활동들은 제6회 전국 미술 대전*의 반성이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의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100여 개의 예술가 단체를 조직하여 예술 속 전통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진시나 문장을 통해서 표출하였다. 이는 그들의 시각을 열어 국제화 안목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당시 현대미술 초기 수집가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외국인들이었는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스위스 대사를 지낸 울리 지그(Uli Sigg)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서 화랑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술가들에게서 직접 구하거나 중간 소개를 거쳐 작품을 수집하였다. 당시 그는 미술품 최대 소장자로서 예술가 230명의 작품 2,000개 이상을 소장하

* 1984년 10월, 문화부와 중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한 전국 미술 대전이다. 주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술경향을 경시한 탓에 따가운 비판을 받는데, ‘중앙미술학원사생의 전국미술대전에 대한 좌담회 기요(中央美院师生关于全国美展座谈会纪要)’(1985년 미술사조(美术思潮) 제1기)에 당시의 대전에 대한 예술가들의 생각이 들어 있다.

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 1,400여 개를 2017년 완공될 예정인 홍콩 'M+시각예술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중국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외국인으로는 울렌스(Ullens) 부부도 있다. 이들은 현재 베이징 798예술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현대 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창작 작업 등을 하는 '울렌스 당대 예술중심(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의 창립인이다.

이러한 외국 소장가들에게 자극 받은 중국인 가운데 신흥 부자들이 1세대 수집가로 나서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예술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중 관이(管艺)는 예술작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미술 애호와 감상을 목적으로 소장을 시작한 후 '관이당대예술문헌관(管艺当代艺术文献馆)'을 세웠다. 또 장루이(张锐)는 몇몇 소장품들이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후에 황랴오위안(黄燎原)과의 합작을 통해 '북경현재화랑(北京现在画廊)'을 창립하였다. 양빈(杨滨)이나 왕웨이(王薇)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양빈의 부인 엔칭(宴菁)은 '예 미술관(AYE Gallery)'을 창립하였고, 왕웨이와 그의 남편 류이첸(刘益谦)은 '롱 미술관(Long Gallery)'을 세움으로써 중국 현대 예술이 크게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민영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다른 한 유형으로 '팡디찬(房地产)', 즉 부동산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쓰촨성 청두의 '상허미술관(上河美术馆)'은 예술의 이상과 부동산 산업을 서로 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창립자들은 미술관이 회사 사업에 전략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에서 보급·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술관 건립에 참여하였다. 알려진 예로 화차오(华侨) 그룹에서 창립한 '화차오 창당대예술중심(华侨城当代艺术中心)'이나 쓰다이

(时代) 부동산의 광저우 '시대미술관(时代美术馆)' 등이 있다.

베이징의 사립 미술관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CBD 지역 모퉁이에 위치한 '금일미술관(今日美术馆)'은 앞에 소개한 두 방식을 합친 경우이다. 창립자인 장바오취안(张宝全)은 원래 부동산 상인이었으며 동시에 열렬한 예술품 애호 수집가였다. 그는 다른 민영 미술관에는 없는 연구와 교육의 기능들도 병행하며 부동산 계획 속에서 성공적인 민영 미술관을 꾸려가고 있다.

이처럼 민영 현대 미술관이 출현하는 것은 정부 공공 미술관이 보여주는 현대 예술 방면의 부족을 보충하고 소규모 미술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중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의 여러 설계사무소들에도 건축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참고문헌

- 邵菁菁, “对于我国公共美术馆建设发展现状的思考”, 「中国美术馆(National Art Museum of China Journal)」, 2014년4期.
- 周琦, “西方建筑师在中国——从中国美术馆新馆的竞标说起”, 「建筑与文化(Architecture & Culture)」, 2013년11期.
- 崔天歌, 中国民营当代艺术美术馆的现状和美国经验的启示, 中央美术学院, 美术学2014硕士论文.
- 廖鹏, “当前我国公共美术馆建设现状分析”, 「艺术百家(Hundred Schools in Arts)」, 2015년1期.
- 诸迪, “当代中国美术馆的现状与问题”, 「美术(Art)」, 2013년3期.
- 都江, 伍长莎, 浅谈“85思潮”对当代美术的影响, 「美术界」, 2011년3期, 2011.3.15.

상인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영국의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Better Bankside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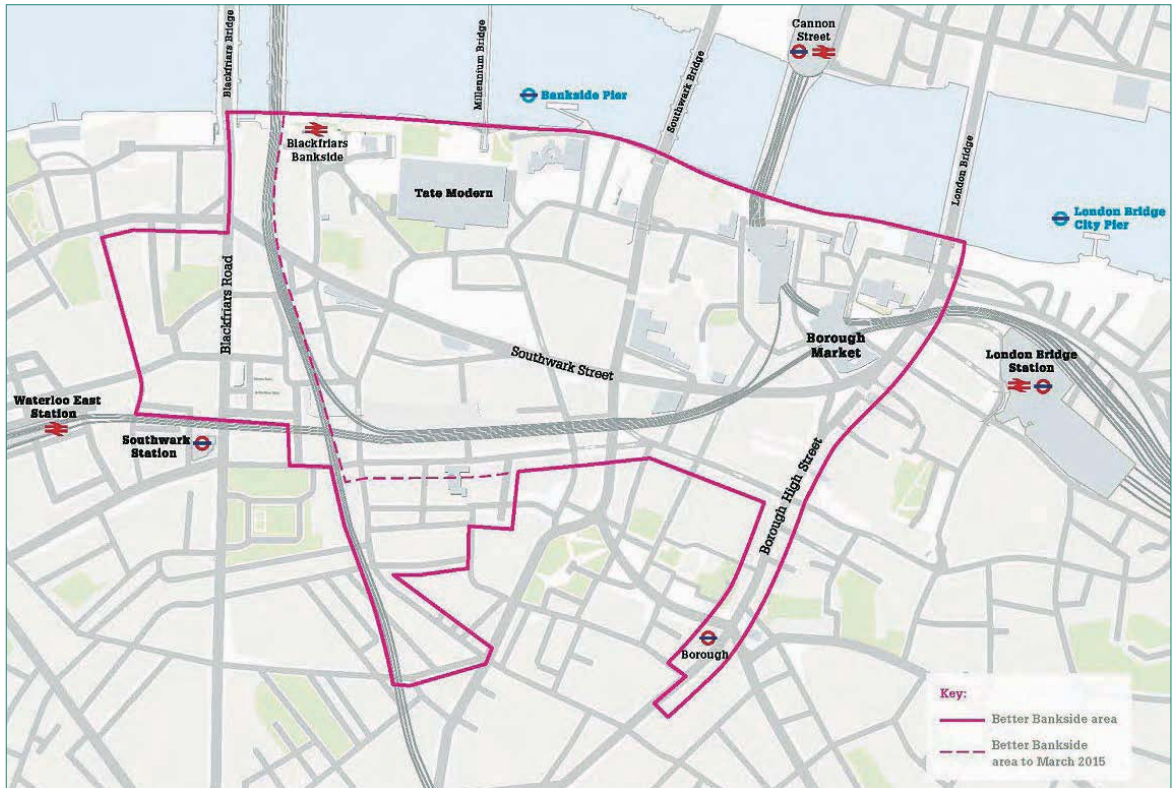
김상희
런던대학교 도시설계 박사과정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심공동화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한 도심지 재생계획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다. 세계적으로도 도심지는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심지 재생을 위해서 각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사를 반영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지도 및 실질적 해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 수범으로 타운센터 매니지먼트(Town Centre Management: TCM)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TCM은 나라별로 도심지 재생이나 장소 이미지의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왔으며, 다양한 활동들로 발전되어 왔다. 그중 영국의 TCM은 한국과 유사하게 도심지 재생을 위해 발전되어 왔고, 자생적인 조직들을 토대로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영국의 도심지 재생 정책은 TCM 조직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더욱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도심지 재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Better Bankside는 최근의 TCM 정책과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무개선지구제도(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 TCM 조직들이 주축이 되어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투표를 거쳐 성공적으로 연장되어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TCM의 특성을 보기에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Better Bankside의 조직 구성 및 자원 조달 방식의 특성, 서비스 활동과의 관계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장소로서의 성공적 도심지 재생과 TCM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두 번째 사업을 위해 제한된 BID 지역 확대안

•점선 부분은 첫 번째 사업의 지역 경계이며, 두 번째 사업 이후 현재까지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Betterbankside.co.uk, 2016.

영국의 TCM과 TCM 정책

1990년대 영국에서는 도심 인구 분산과 도시 외곽 상가시설의 증가에 따라 쇼핑 패턴이 변화하면서 기존 도심지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었다. 타운센터에 위치한 사업자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역별로 자발적인 TCM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지역주의와 재생이 정책적으로도 강조되면서 TCM 조직들이 지역마다 급속히 번성하여 1987년 런던 일포드(Ilford)를 시작으로 1996년 182개, 2000년에 500여 개, 2015년 영국 전체 600개에 이르는 TCM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CM 도입 이후 기본적인 청결·안전·주

차서비스 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TCM 조직들은 현재 지역에 따라 규모·조직구성·채원조달방식·활동내용 등에서 ‘Town teams’, ‘Town Centre partnership’, ‘BID’, ‘business and trader forum’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BID의 경우 기존에 활동하던 TCM 조직들을 기반으로 2005년 5개의 런던 내 BID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BID는 자금모금 활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TCM보다는 안정된 자금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한 TCM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마케팅 및 홍보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체에 140여 개가 운영 중이

며, 런던(34개)에 가장 많은 BID가 분포되어 있다. 영국의 TCM 정책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TCM 조직들을 평가하고, 이 작업을 통해 제도와 지침들을 발전·정비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TCM의 역할은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이후 일련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도심지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며, 2013년 정부에서는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a wide ranging package of support for high streets'를 발표하면서, 특히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매니지먼트를 보여 온 BID에 주목하게 된다.

타운센터 매니지먼트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이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이 정책에서는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TCM, 특히 BID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업자 주도의(business-led)',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community-oriented)'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명시한다. 따라서 타운센터의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이를 위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런던 중심부의 Better Bankside 지역 특성 및 단계

Better Bankside가 위치한 뱅크사이드(Bankside) 지역은 행정구역상 런던의 서더크(Southwark) 구에 위치한다. 템스 강변의 남쪽에 면하며, 1990년대 말 템스 강변 재개발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비롯하여 밀레니엄 브리지와 글로브 시어터 등이 위치한 관광지가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런던 시청사를 포함한 기존 업무지구에 2010년 이후 주거·호텔 등의 개발로 고층 건물군이 들어서게 되었다. 영국에서 세 번째이자 런던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BID로 2014년

부터 세 번째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역 내 62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및 서비스

Better Bankside는 청결·관리·안전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사업 이외에 경제적 부분에서 마케팅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자 전체를 위한 장소로서 공공공간 개선사업(Urban Forest)과 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Better Bankside의 활동 및 서비스 내용

활동 목표	세부 프로젝트 내용
청결 및 관리	거리 청소 팀 배치, 재활용 수거
안전 및 보안	치안 감시,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지역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사이트(Visitbankside.com) 운영 온라인 뉴스레터(What's On Newsletter) 발행 소셜미디어 활동 이벤트 개최(Merge Festival-award , Bastille Festival) 방문객을 위한 정보(가이드북, 자전거 홍보, 앱 개발) 제공 사업체 홍보를 위한 디지털 버즈카드(buzz card) 발행, 방문객 리서치 미디어 홍보
사업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포럼 장소 대여 고용자 훈련 커뮤니티들을 위한 자전거 대여·수리·보관소 소개 유지·관리 수업
공공 공간 개선사업	Bank Urban Forest 사업(2007년 시작)
지역 커뮤니티 연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나 커뮤니티 용도로 장소 대여 (Bankside Community Space) 지역 자선단체 연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지역 구인·구직 소개(Employ SE1)

자료: Betterbankside.co.uk, 2016, 재구성



자전거 홍보



녹지사업

자료: Betterbankside.co.uk, 2016.

또한 해당 지역 내 역사적 재래시장인 보로 마켓(Borough Market)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돕고 있다. BID의 회원이 아니지만 보로 마켓이 지역 사업 자들에 유리하고 지역공동체 주민들에게 공공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시장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변 공간 관리를 제공·지원하고, 지역 사업자·주민·시장 사이의 의견과 마찰을 조율해 오고 있다.

조직 구성

미술관 대표, 지방자치단체, 상가소유주, 사업자, 컨설턴트 등 8명으로 구성된 BID 위원회는 BID 회원으로 구성된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운영팀은 각 활동

과 서비스 분야에 따라 8개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

재원 조달 방식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의 대상을 정하며, 부담금은 전체 수익의 약 90%에 해당한다.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은 소규모 사업체나 BID 지역 외부의 사업, 부동산과 토지 소유주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런던 시·지방자치단체·EU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공공 자금이다. 지출을 살펴보면 기본적 공공 서비스인 청결(17%)과 안전(19%), 공공 공간 개선 및 커뮤니티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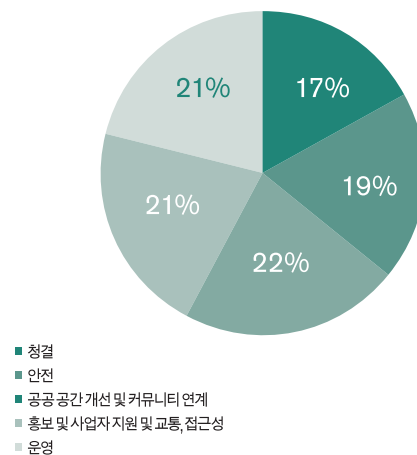
2014년 수익 내역

(단위: 파운드)

재원	금액(비율)
Bid 부담금	1,420,822 (90%)
추가수익 (기부금이나 공공 자금 등)	151,308 (10%)
합계	1,572,130

자료: Betterbankside.co.uk, 2015, 재구성

2014년 지출구성비



(22%), 홍보 및 사업자 지원과 교통·접근성(21%), 운영 비용(21%) 등으로 쓰였다.

시사점: 성공적인 도심지 재생과 TCM의 역할

도심지는 지역공동체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영국의 도심지 활성화 정책은 도심지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업자의 요구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책 사이에서 협의와 중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타운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나 안전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치중해 온 반면 사업자 주도로 시작된 TCM 조직, 특히 BID는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침체한 경제상황의 영향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BID는 사업자 주도의, 사업자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매니지먼트가 과연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잘 이해하는 자생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를 끌어가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Better Bankside에서 보이는 성공적인 TCM의 특징은 정책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TCM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BID는 이를 승계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운영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BID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BID는 재원조달 방식에서 전체 수익의 85~90%를 사업자의 부담금에 의존하는 조직인데, 부담금은 안정된 수익인 반면 사업자의 수에 따라 거

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장 운영 등의 상업적 수입,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의 후원 등으로 추가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활동 내용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BID 조직의 정책 이해, 그리고 공공 부문이 기여하는 조직 구성과 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경제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의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나 쓰레기 수거 등 매우 기본적인 한 정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공공간 개선사업, 커뮤니티 공간 확보, 중세시장의 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TCM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특히 안전을 위한 활동과 조직 운영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최근 많은 보고서들에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는 타운센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Better bankside 홈페이지(Betterbankside.co.uk)
- ATCM (Association of Town Centre Management)(2014), London's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A report prepared for the GLA by Shared Intelligence and the Association of Town & City Management, ATCM (Association of Town Centre Management).
- ATCM (Association of Town Centre Management) (2015),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Guidance And Best Practice, 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British BIDs(2014), Nationwide 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Survey 2014, British BIDs.
- Better Bankside(2014), Renewing and Extending Better Bankside: A Proposal for 2015-2020, Better Bankside.

우리나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2011년의 동일본 지진과 올해 4월에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비롯하여 9월 경주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로, 이를 계기로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최초로 6층 이상 10만 m^2 이상 신축 건물에 의무화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지금은 3층 이상 500 m^2 이상 건축물을 비롯하여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학교 등 건물 중요도가 1 이상인 건축물(지진 I 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내진 대상 대비 내진 설계된 건물 비율인 내진율은 계속 저하되어 지금은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33%,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66%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올 4월에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방지 종합대책(2016. 5.)'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여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건축규정 완화: 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정 등 완화 적용(2017. 1, 국토교통부)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500 m^2 미만의 1·2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 전체(2017, 행정자치부)

보험료 할인: 기존 건축물 보강 시 20%, 내진 미대상 신규 건축물 보강 시 30%(2017, 국민안전처)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5년 12월 기준)

구분	전체(A)	내진 대상(B)	내진 적용(C)	내진율 (C/B×100)
동수(동)	6,986,913	1,439,547	475,335	33.0%
면적(m ²)	3,534,068,240	2,797,190,288	1,852,449,397	66.2%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주요 이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내진 기준이 적합한지와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해야 할지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업역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들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약한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을 2개로 나누고 있다. 지진 I 구역의 경우 지진 가속도 0.22g, 지진 II 구역은 0.14g를 적용하여 건축물 내진설계를 한다. 지진 II 구역은 강원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이며, 지진 II 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진 I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진 구역별로 적용되는 지진 가속도는 2,400년의 재현주기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약하지 않다는 것이 지진 전문가의 평가이며 개략 규모 6 정도의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지진구역과 지진 가속도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철도·댐·공항 등 SOC 시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이번 경주 지진 규모 5.8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최고 규모였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 건축물 및 SOC 시설의 내진 기준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주관으로 이번 경주 지진의 각 시설물에 대한 영향 분석, 국외 사례 조

사 등을 바탕으로 내진기준 조정 필요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내진설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각종 기준 정비를 거쳐 건축물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종 시설과 구조물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해당 지역
I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남부
II	도 강원도 북부, 제주도

건축물 내진설계를 구조기술사가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임에도 관계 전문기술자로서 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내진설계 범위는 6층 이상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층에서 5층의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사의 책임하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진다.

일선에서는 건축사는 구조에 비전문가이므로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전담하여야 안



정성이 제고된다는 의견과, 건축사도 대학교육에서 소정의 구조 지식을 습득하며 건축사 선발 과정에서도 구조 지식을 평가하므로 5층 이하의 구조설계는 가능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을 구조기술사가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건축사의 구조 전문성과 아울러 건축구조기술사의 인력 수급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자격증 보유자는 전국에 1,000여 명가량이 있으며,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700여 명가량이다. 시·도 단위의 광역지자체별로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인력을 볼 때, 10여 개 광역지자체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10여 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건축주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술한바와 같이 1988년 내진설계 도입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7년

초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현재 제도 개선 중에 있다. 단층의 건축물도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m² 이상은 내진설계 대상이며, 이 밖에 건물 중요도 특등급과 1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비롯해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지진 1구역)에서 1층이라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12월 16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가로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는 우리나라 지진 특성을 볼 때 저층 건축물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7년 하반기까지 2층 또는 200m², 모든 주택까지 내진 의무 대상에 추가·확대하기로 하였다.

* SOC 시설물 내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2016.11.~2017.6, 지진공학회)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호)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최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지진 1구역에서 중요도 1 이상의 건축물(특등급과 1등급 건축물로서 학교와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부서의 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최근의 지진을 계기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도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가 기준대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사용승인 시에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논할 때는 그간 이루어진 건축제도의 개선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부조리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역할을 최소화하는 대신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 왔다. 이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허가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2014년 12월 발표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도 이 센터 설립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된 바가 있으며,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올해 재추진하고 있다.

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공무원의 미비한 전문성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추진 방향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과 현황, 건축물 내진설계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5월 지진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경주 지진을 계기로 12월에 대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추가 대책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가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 센터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의 연내 발의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관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를 헤아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진설계 관련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내진에 대한 제도는 지진 발생 추이와 더불어 제반 여건이 충족됨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빈집 재생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국내 빈집 실태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

국내 전국의 빈집은 2000년에 약 51만 호에서 2010년 약 79만 호, 2015년에는 약 107만 호로 급증하는 추세이다(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 전체 주택 수 가운데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4.68%에서 2010년 5.41%, 2015년 6.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빈집 발생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2010년 대비 2015년 현재 주택 유형별 빈집의 증가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36만 9,000호에서 57만 2,000호로 증가하였고, 다세대의 경우 7만 6,000호에서 16만 6,000호로 증가분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2만 1,000호에서 26만 1,000호로 감소하였다.*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의 빈집은 27만 1,000호로 3.7%를 차지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빈집은 79만 8,000호로 8.9%를 차지하고 있어 비수도권 빈집에 대한 정책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주택총조사 2015). 지역별로 도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동 지역의 빈집 비율은 5.1%이며,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면 지역은 13.8%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 빈집에 대한 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 2015). 30년 이상 된 빈집은 31만 4,000호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전남·경북·경남 지역이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 빈집 특성 및 노후 정도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인구주택총조사 2015).

빈집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 방치 빈집으로 인한 지역 환경 저해 문제점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폐가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화재·방화사고 위험 증가, 범죄사고 발생 및 지

*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빈집 통계상 미분양·미입주 아파트 물량을 포함하고 있고 폐가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지역별 빈집 정책 추진 대상에 대한 다차원적 설정이 필요하다.

빈집 발생 현황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빈집(호)	비율	빈집(호)	비율	빈집(호)	비율	빈집(호)	비율
전국	513,059	4.68%	727,814	5.50%	793,848	5.41%	1,069,000	6.5%
서울	56,642	2.96%	79,800	3.44%	78,702	3.12%	79,000	2.8%
부산	25,031	3.11%	53,651	5.55%	40,957	3.97%	87,000	7.4%
대구	14,223	2.68%	18,192	2.99%	29,766	4.30%	30,000	4.0%
인천	18,053	2.94%	36,049	4.98%	41,437	5.04%	47,000	5.0%
광주	13,741	4.24%	12,993	3.43%	17,534	3.95%	27,000	5.5%
대전	12,814	4.00%	16,267	4.28%	17,279	4.10%	26,000	5.6%
울산	9,673	4.22%	14,017	5.07%	15,646	5.03%	21,000	6.0%
세종	-	-	-	-	-	-	16,000	20.3%
경기	80,720	3.95%	126,581	4.63%	154,099	4.79%	145,000	3.9%
강원	38,349	9.15%	48,077	9.73%	52,218	9.73%	59,000	10.4%
충북	26,492	6.69%	32,174	7.05%	37,251	7.30%	55,000	9.9%
충남	48,245	8.99%	51,401	8.10%	60,016	8.38%	74,000	9.8%
전북	32,064	5.98%	44,696	7.47%	44,526	7.03%	74,000	10.8%
전남	39,955	6.58%	53,653	7.99%	56,574	8.19%	103,000	13.8%
경북	50,104	6.47%	62,650	7.14%	75,116	8.05%	108,000	10.9%
경남	41,711	5.34%	67,396	7.15%	64,998	6.29%	99,000	8.7%
제주	5,242	4.29%	10,217	6.66%	7,729	4.86%	18,000	9.5%

자료: 통계청(2000.2005.2010.2015), 인구주택총조사

역 주민 불안감 증대, 빈집 붕괴사고 위험 증가, 지역 경관 악화 및 미관 침해, 쓰레기 적치 및 들고양이 서식지화로 인한 위생 문제 증가 등 장기 방치 빈집으로 인한 지역 환경 위해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박성남 외, 2016).

일본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빈집이 약 820만 채로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에 달하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대수 축소로 인한 주택 수와 세대수의 미스매치 현상과 연계된 빈집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15년 5월 26일 시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빈집 증가 문제와 장기 빈집으로 인한 지역

위해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빈집에 대한 국내 정책적 관심의 증대

현재까지의 국내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추진 현황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농어촌 지역 빈집 정책은 2014년 3월 24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유해할 경우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제64조를 신설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것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항에 빈집의

정의와 빈집 정비 내용이 포함되면서 농촌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진하였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지자체 빈집 정책은, 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장기화와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10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10월에는 부산광역시가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6년 6월 기준 30개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및 관리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또한 2012년부터 부산시, 2015년부터 서울시,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지자체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국비지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추진 중이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은 사업 대상지에 빈집들이 많아 빈집을 활용한 계획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공간 정책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으며, 계획적 빈집 정비와 공공의 개입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빈집 정비 제도의 기반 구축과 쟁점 사항

농어촌 지역 이외의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대한 제도 기반 구축은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개정을 통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조항 신설을 들 수 있다(2016. 7. 20. 시행).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방치된 도시 내 빈집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계획적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필요한 특례법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2016. 11. 8.)되어 진행 중이다. 이 특례법안은 "빈집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하여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사유를 설정하였다. 2016년 9월에 열린 특례법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특례법안은 크게 빈집 정비사업 관련 사항과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 장의 표에서 정리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 정비 제도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사항으로 ①방치 빈집 직권 철거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가 ②빈집정비계획을 통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원 지원

* 국비지원도시재생 사업은 선도지역 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2016년 신규지역 33곳(경제기반형 5곳, 근린중심지가지형 9곳, 근린일반형 19곳)에서 추진 중이다.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선정 85개 마을(도시형 30개, 농어촌형 55개), 2016년 선정 66개 마을(도시형 22개, 농어촌형 44개)에서 추진 중이다.

** 「건축법」,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 2 및 제81조의 3 신설

*** 국토교통부 외(2016),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공청회 자료, 2016. 9. 22.

빈집정비사업 관련 사항

- 시장·군수 등은 빈집 또는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빈집 출입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 부여. 수도·전기·가스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할 근거 마련
- 빈집 정비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자체 공보에 고시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
- 빈집정비사업을 경수선, 개축·증축 등, 철거, 철거 후 주택 건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하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소유자가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직권 철거 가능
-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 가능.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장·군수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음.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보 공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보조 및 융자 등)

- (보조융자) 안전사고·범죄발생 예방, 임대주택·정비기반시설 등 활용, 사회적기업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자·융자 가능,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지원 가능
- (조세감면) 빈집정비사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가능
- (건축특례) 빈집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건축심의의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건축규제 완화, 지원기구 등)

- (건축특례) 부지 인근에 노상·노외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의 용적을 완화
- (임대주택) 공공임대·준공공임대주택(최초 임대료 규정하는 경우 포함) 등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사업비를 지원하며,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음. 용적을 상한적용(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20% 이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위 내용은 2016년 9월 공청회 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됨

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③도시지역 빈집과 농촌지역 빈집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인 「건축법」개정에 의한 빈집 직권 철거'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실행 가능하나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소유자 연락의 애로사항, 민원 발생의 우려, 보상 등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특례법 제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수의 중소 지방도시에서는 충분한 사업 재원 확보가 어려워 중앙정부 재원 지원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향후 공공성을 토대로 공공 재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 번째 쟁점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사항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

다. 따라서 특례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 정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빈집정비 정책 추진 과제

가장 먼저 빈집 정비 정책은 포괄적 주택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빈집의 증가는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나 주택 멸실 물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신규 주택의 수요를 초과한 공급물량이 지속되는 한 빈집의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례법이 제도화될 경우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활용이나 철거를 통한 지역 위해요소 빈집 멸실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 방치 빈집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택 정책 아래 빈집 정비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장래 빈집 전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박성남 외, 2016).

우선적으로는 지역 위해요소로의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각적으로 빈집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지역 맞춤형 빈집정비 확산 방안에 대한 지속적 모색 및 시도가 필요하며, 정책 발전 초기에 시범사업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의 빈집 정책은 저렴·양호주택의 공급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향후 빈집을 활용한 저렴·양호주택의 공급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 정책 관련 제도 구축에 있어서는 중앙·광역·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빈집 정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및 다양한 세부 지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공·폐가 재생 추진 전략과 현장 중심의 빈집 재생 전략이 요구된다(박성남 외, 2016). 지역 특성, 지역사회 특성, 빈집 발생원인 및 대상, 문제점, 지역 수요, 자원 연계 가능성, 소유자 특성 등 지역마다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다차원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 빈집 재생사업은 소규모 장소 중심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빈집은 이용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빈집을 자산적 접근을 통해 활용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빈집 재생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성이 매우 높은 정책임이 확실하다. 빈집 재생 정책의 장점 중 하나는 한 유닛의 빈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재원을 투입해 여러 편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는 지역 위해요소로 꼽히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장기 방치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기반 건축업체나 자활기업,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등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빈집 주변 거주 주민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 증진과 지역 주거지 이미지 향상도 빈집 정비사업이 가져다 줄 효과다.

거시적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저렴·양호주택의 공급과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확충 뿐 아니라 건설 등 관련 부문 경제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빈집 다발생 쇠퇴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 간 불균형 일부 해소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빈집 재생 정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내 빈집 재생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역맞춤형 사업 확산을 통해 주거권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외(2016),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공청회 자료, 2016.9.22.
- 박성남, 김승남, 윤주선(2016),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 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발간 예정)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인구주택총조사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5”

밴쿠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계획

<http://vaha.ca/>

<http://vancouver.ca/news-calendar/Public-invited-to-get-firsthand-look-inside-temporary-modular-housing.aspx>

<http://vancouver.ca/news-calendar/city-moves-forward-with-first-temporary-modular-housing-project.aspx>

<http://vancouver.ca/news-calendar/Vancouver-Affordable-Housing-Agency-to-build-250-homes.aspx>

모듈러 주택 프로젝트

캐나다 밴쿠버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모델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시 정부는 메인 스트리트에 실제로 조성될 모듈러 주택의 모델을 록슨 광장(Robson Square)에 전시해 시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밴쿠버 시와 VAHA(Vancouver Affordable Housing Agency)는 최근 밴쿠버의 주거난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구입능력 위기(housing affordability crisis)에 대응, 일종의 조립식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조성해 저소득층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조성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완성된 구성 요소를 크레인을 통해 부지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완공이 가능하고, 완공 즉시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다.

메인 스트리트의 모듈러 주택은 2017년 초 착공될 예정으로, 4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각 실은 250m² 면적에 개인 침실과 부엌을 갖추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밴쿠버 시유지 3곳에 총 2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 중산층 주민과 노년층의 수요에 맞추어 조성되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임대주택의 65%를 2개 또는 3개 이상의 침실을 갖춘 방으로 지어, 밴쿠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개 사업지는 이스트 프레이저 랜즈(East Fraser Lands) 지역에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주거시설은 물론 업무 · 교육 · 상업 · 오락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밴쿠버 시는 이번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세 곳을 포함하여 시 소유의 20개 지역을 저렴한 주택 부지로 중앙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에 조성될
모듈러 주택
자료: VAHA 홈페이지
(<http://vaha.ca/>)



시카고 리버워크 완공, 대중 공개

<http://www.riverwalkexpansion.com/index.html>

https://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supp_info/chicago_riverwalk.html

<http://www.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



©Kare Joyce Studios



시카고 리버워크

자료: [archdaily\(www.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http://www.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

미국 시카고 강을 따라 보행로와 공공공간, 레스토랑 등 상점, 다양한 문화·오락시설을 조성하는 ‘시카고 리버워크’ 프로젝트가 최종 3단계 공사를 끝으로 완공되었다. 시 정부는 지난 10월 3단계 구간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카고 리버워크는 시카고 강이 미시간 호를 만나는 지점부터 왜커 드라이브(Wacker Drive)가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리버워크 조성에 앞서 왜커 드라이브의 폭 등을 조정하는 재정비 사업이 2002년부터 이루어졌고, 이때 리버워크 조성 공간 확보 등이 고려된 점을 감안하면 시카고 리버워크가 완공되는 데 15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총 3단계에 걸쳐 조성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단계 구간은 ‘미시간 호~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로 2009년 마무리되었고, 2단계 공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살 스트리트(LaSalle Street)’ 구간에 진행되어 2015년 완료되었다. 3단계 공사는 ‘라살 스트리트~레이크 스트리트’ 구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2·3단계 구간에 포함되는 6개의 블록에는 각자 특성 있는 콘셉트와 테마를 부여하여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블록별 테마와 조성 시설

단계	구간	테마	조성 시설 및 내용
2단계	스테이트 st. - 디어본 st.	마리나(Mar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스토랑 등 상점 수상택시, 관광용 보트 등 이용시설 강을 향해 조성된 벤치 등 야외 좌석시설
	디어본 st. - 클라크 st.	만(Co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약 대여·정박 시설 야외 좌석시설 강물 범람 방지를 위해 강을 따라 식재
	클라크 st. - 라살 st.	리버시어터(River The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커 드라이브와의 보행 연결로 휠체어와 유모차도 물 근처로 이동 가능하도록 조성한 경사로 계단 중간 중간에 식재, 그늘 제공
3단계	라살 st. - 웰스 st.	워터플라자(Water Pl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 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객과 보행자를 위한 야외 좌석시설 다양한 종류의 상점
	웰스 st. - 프랭클린 st.	부두(Jet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유식 습지정원 등 서식생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프랭클린 st. - 레이크 st.	보드워크(Boardw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커 드라이브와의 보행 연결로 휠체어, 유모차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만한 경사로 조성

RIBA 건축상 수상한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와 UTEC

<https://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6/DamienHirst'sNewportStreetGalleryWins2016RibaStirlingPrizeForTheBestBuildingOfTheYear.aspx>

<https://www.architecture.com/Awards/Awards2016/StirlingPrize/Home.aspx>

<https://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6/UtecWins2016RibaInternationalPrize.aspx>

<https://www.architecture.com/Awards/InternationalPrize2016/UtecUniversidaddeIngenieriaY Tecnologia.aspx>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는 2016 RIBA 국제 건축상에 페루 리마에 위치한 공과대학교 UTEC 캠퍼스를, 2016 RIBA 스텔링 상에 런던 남부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를 선정하였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RIBA 스텔링 상은 매년 영국 건축계에 공헌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영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건축상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RIBA 국제 건축상은 매년 전 세계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016 RIBA 국제 건축상: UTEC 캠퍼스

UTEC(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는 페루 젊은이들의 활발한 사회이동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를 교육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공학대학이다.

심사위원들은 두 주거구역의 경계선이면서 협곡 끝자락에 우뚝 솟은 이 '수직 구조의 캠퍼스(vertical campus)'가 대학의 설립 목적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기후와 지형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주변 지형과 어우러지며 일련의 구조가 층층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페루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마추픽추'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도 있었다.

건축물은 여러 개의 프레임 구조가 연결되고, 그 사이사이에 교실 실험실 사무실과 같은 공간이 삽입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프레임 구조는 필요한 내부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내면서도, 건축물이 강한 개방성을 띠도록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레임 구조는 건축물 내부에서는 외부 도시공간을 조망할 수 있고 시민들이 건물 밖에서 건축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개방적인 구조를 "UTEC는 리마의 시민들에게 '전시(display)'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UTEC 전경

자료: RIBA 홈페이지(www.architecture.com)



UTEC의 프레임 구조와 안쪽에 위치한 내부공간

자료: RIBA 홈페이지(www.architecture.com)

©Iwan Baan

2016 RIBA 스텔링 상: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런던 템스 강변 남부 복스홀(Vauxhall) 지역의 뉴포트 스트리트(Newport Street)는 웨스트엔드 공연산업의 중심으로 한때 호황을 누리다 쇠퇴한 거리다. 갤러리는 이 거리에 방치된 채 남아 있던, 극장의 배경과 무대를 만드는 작업장 건물 세 채를 리모델링하고 양 끝에 두 채의 신축 건물을 지어 완성하였다.

신축 건물은 붉은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여 기존에 있던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커다란 LED 패널을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파사드를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러리가 철로와 면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LED 패널과 파사드는 기차 이용자들에게 미술관을 각인시키고 방문을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았다.

다섯 개의 건축물은 연속적이고 일관된 조명을 통해 연결성을 가지게 되며, 정교한 디테일에 감각적으로 조성된 내부 계단(staircase)은 단순하고 잘 정돈된 통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 연결된 내부 공간은 개별 작품은 물론 규모가 큰 쇼와 작품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심사위원들은 더불어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거리에 늘어난 갤러리 건물과 파사드



갤러리 전시 공간



철로와 면해 있는 갤러리의 모습



갤러리 내부의 나선형 계단

© Hélène Binet

시애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속도제한 강화

<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

<http://www.seattle.gov/visionzero/speed-limits>

<http://usa.streetsblog.org/2016/09/27/seattle-city-council-approves-20-mph-speed-limit-on-residential-stre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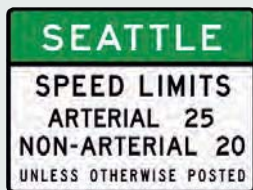
미국 시애틀에서는 11월 7일부터 강화된 도로 제한속도 규정이 시행된다. 지난 9월 시애틀 시의회는 주거지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25마일에서 20마일(약 32km/h)로 하향 조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시애틀 중심 도로의 제한속도도 시간당 30마일에서 25마일(약 40km/h)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는 시애틀 시가 203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심각한 부상을 줄 '0'으로 만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시애틀 교통부(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DOT)는 매년 시애틀에서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15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제한속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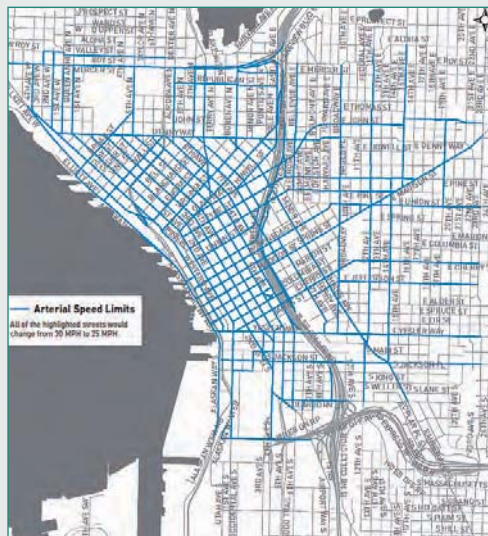
SDOT에 따르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시간당 20마일 속도의 차량과 충돌할 때 살아남을 확률은 90%이며, 이보다 10마일 빠른 시간당 30마일로 달리는 차량과 충돌하면 생존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50%가 된다.

시 정부는 앞으로도 낮은 제한속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심각한 충돌사고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SDOT는 시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제한속도 규정을 널리 알리고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애틀 경찰과 협조하에 순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캠페인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제한속도 표지판

자료: SDOT 홈페이지(<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



제한속도가 시간당
25마일로 하향 조정되는
시애틀 중심 도로

자료: SDOT 홈페이지
(<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6.10.1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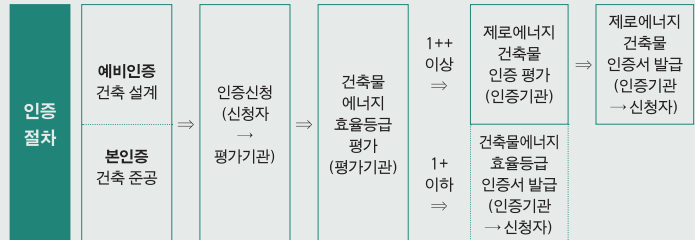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일부 주차 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이상*을 만족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과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인증 절차는 인센티브의 지급과 설계 점검 등을 위해 설계단계에 부여되는 ‘예비인증’, 준공 후 받을 수 있는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안)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20% 이상 ~ 40% 미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 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조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 수준(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90KWh/m²·년)

**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환경부 자연정책과
2016.11.10.



인천 서구의 연희 자연마당 조성 전·후

자료: 인천시 보도자료, "인천 연희 자연마당 완공, 시민에 개방한다", 2016.7.5.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공공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부산 북구,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전북 부안군 등 모두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에 습지·개울·초지·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4개 지역*에 자연마당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조성될 4곳을 포함하면 전국 18곳에 자연마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사업 부지는 약 5만 8,000m²이며,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와 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의 또 다른 사업 대상지인 기장군 일광면의 사업 부지는 일광택지구·일광천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작지였으나 장기간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약 2만 3,000m² 면적의 땅이다.

울산 북구 신천동 선정 부지는 면적이 5만 5,000m²로, 도시 내 남아 있는 소나무숲과 불법 경작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전북 부안군 부안을 선정 지역(약 2만 8,000m²)은 도심과 접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논으로 사용되었으나,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습지 등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대전·군산·경산 3곳의 자연마당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특히 정부대전청사 앞에 조성되는 자연마당은 도심 한복판, 즉 시민들과 가까이 위치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콘크리트 광장 대신 숲·습지·초지 등 생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완료: 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대구 동구, 전북 익산, 인천 서구
2016년 완료 예정: 대전 서구(정부대전청사), 전북 군산, 경북 경산
설계 및 착공: 광주 남구, 충북 청주, 전남 광양,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전북 고창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2016.11.9.



동대문 옥상낙원의 조성 전·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 개최”, 2016.11.9.

‘동대문 옥상낙원’과 ‘수원시 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이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각각 프로젝트 부문과 학술연구 부문 대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대문 옥상낙원

사람의 발길이 끊겨 방치된 채 남아 있던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의 옥상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옥상에 남아 있던 18톤 정도의 폐기물이 치워지고,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생산과 협업(co-working)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옥상낙원은 일반 주민들이 운영과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을 펼쳐 공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갈 계획이다.

수원시 안전골목만들기 10원칙

수원시 골목길의 경관과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을 위한 10원칙*을 정립한 연구물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들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휴대용 리플릿으로 제작·배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등하교길 어린이 보행안전 노란 발자국’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이 수상하였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 지하철역사 정보안내체계 혁신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체계 재정립 연구’등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각 1점씩 선정되었다.

* ①잘 보이게 하기 ②정보 제공하기 ③공간 활성화하기 ④거리 밝히기 ⑤예쁘게 꾸미기 ⑥거리 비우기 ⑦부드럽게 표현하기 ⑧막힌 공간 개방하기 ⑨유지관리하기 ⑩함께 가꾸기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016.11.1.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마크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해 드립니다”,
2016.11.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 시는 300가
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친화적
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
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37개 항목은 다시 정량평가와 정
성평가 항목으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량평가에서는 건축물 환경의 물리적 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
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를 주로 평가하게 된다.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유아 및 어
린이 용품 중고장터 개최 등)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주
요 평가 기준은 ▲실내구조가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
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공용출입구의 유
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 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
재를 설치하였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모두를 포함한다. 건축물에 따라
준공 전 건축물에 대한 ‘예비인증’, 신축·기존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본인
증 획득 후 2년 경과 건축물 대상의 ‘유지관리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
여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자치
구에서 서울시에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 점검 등
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된 단지에 대해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주거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
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의 지진 대응 노력

대전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2016.10.10.

울산시 세정담당관
2016.10.5.

경기도 토지정보과
2016.11.9.

‘대전시 지진 대응 종합대책’ 마련

대전시는 ‘대전시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지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가속화한다. 공공시설물 79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444곳에 대해 내진 성능을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시민 이용이 많은 건축물·교량부터 우선 보강할 방침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시 지방세 감면과 견폐율·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진안전성 인증제도’를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지진가속도 계측기와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진 대응 교육이나 훈련·홍보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앞당겨 추진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확대 등 종합지원 계획’을 시행한다. 당초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내진 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진이 잇따르자 지진 발생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개정 내용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울산시 내에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신·증축 시 1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울산 경주지역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경기도가 우리 집과 주변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건물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에 그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한 CPTED 프로그램의 다양화

광주시 도로과
2016.10.27.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6.10.30.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6.11.10.

CPTED 사업 후 평택 점촌안심마을 모습



안전컨트롤 타워

여성안심길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안심등네 만들어요!", 2016.10.30.

모듬지기 시스템 설치 모습



숫을대문, 모듬지기도 설치된 골목 입구 사방등



블랙박스와 안전 펜스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모듬지기로 어둡고 깊은
막다른 골목을 지킨다!", 2016.11.10.

광주시,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설치 확대

광주시는 위급상황에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을 1,411곳에 추가 설치하였다. 광주시의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이 설치된 주변도로의 영상을 촬영하여 10일 이상 저장하는 '블랙박스형',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가로등 주변 50m 반경 안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보호자와 경찰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콘형'으로 구분된다. 설치 장소는 범죄·학교폭력·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원룸 주변 골목길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공중화장실 등이다.

경기도, 평택 점촌안심마을 CPTED 사업 완료

경기도가 평택시 서정동 점촌안심마을을 대상으로 한 CPTED 사업을 마쳤다. 사업 지역에는 여성안심길이 조성되었으며 생활도로 개선, 건축물 환경 개선, 보안등 야간조도 개선, 어린이공원 내 태양광블록(LED경관조명)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이뤄졌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셉테드 사업에 스마트 위치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여성안심길 두 곳에 스마트 위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컨트롤 타워'를 세워 스마트폰을 소지한 여성·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시, '모듬지기'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서울시는 광진구 중곡3동의 막다른 골목 지역을 하나의 '모듬'으로 보고 방범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설치·운영하는 '모듬지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듬 입구에 설치되는 '숫을대문'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비상 버저, 경광등, LED 조명, 문안 순찰판으로 구성된다. 주택 주변 골목의 사적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듬지도', 주택과 주택 후미진 담장 위를 밝히는 '사방등', 자연감시기능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헬스존, 화분, 담장 도색, 안전 펜스 등)도 설치되었다. 모듬지기 시스템은 모듬대표, 주민, 구청, 주민센터, 파출소 등 다양한 관리 주체가 협력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속 유희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

인천시 교통정책과
2016.10.20.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과
2016.11.7.



성산교회 활용안

자료: 대전시 보도자료, “옛 성산교회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 2016.11.7.

인천시, 지하철 역사 내 유희공간에 시민 공간 조성

인천시는 지난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21개 지하 역사 내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노년층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 역사에도 청소년 춤 연습장, 작은 도서관, 건강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서구청역과 인천대공원역에는 상시건강상담소가 마련되며, 남동구청역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한 탁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래내시장역, 시민공원역에는 청소년 댄스마루를 설치해 청소년들이 거리 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 장소를 제공한다. 검암역에는 인천문예협회의 협조로 갤러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11월 중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연 전문가·브랜드 담당자 등이 참여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연중무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전시, 성산교회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대전시가 양지근린공원 내 옛 성산교회를 지역 시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에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산교회를 매입하였으며, 지난 3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성산교회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지역 내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의 지하층은 공연, 회의,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철거나 확장이 자유로운 모듈형 공간으로 설계된다. 1층에는 주차장과 안내 공간이, 2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과 커뮤니티 룸 등이 들어선다. 3층은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공간을 조성해, 시민·예술가·청년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4층에는 지원센터 위한 관리·사무 공간이 조성되며, 옥상에는 ‘별빛공원’을 만들어 주민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관련 전문지식센터 독일 BBSR

백한열
KSP Jürgen Engel
건축사무소
디자인 디렉터

독일 건설 및 지역계획청(BBR)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는 연방 환경건설부(BMUB)의 산하기관으로, 독일 정부의 지역·도시·주거의 계획 및 부동산·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본(Bonn)과 베를린(Berlin) 두 도시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0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BBSR

좌 본에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 베를린에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하 Zukunft Bau
프로젝트 워크숍(2016)



“BBSR의 조직은
지역 및 도시계획과
(7개 부서)와
건축 및 주거과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부서들은
독립적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 부서 간의 협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역할

BBSR은 업무범위 및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기관이며, 이슈가 되는 현안 또는 미래계획과 관련하여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연방 건설환경부(BMUB)로부터 법적인 위임을 받아 정책 수립 및 정책 조연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 내 지역과 인접 국경지역에 관한 공간계획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적합도에 따라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 또는 타 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위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기관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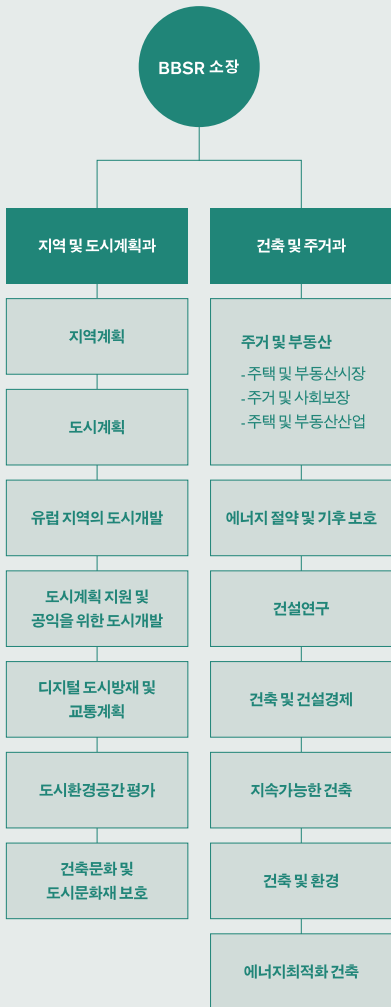
1997년 제정된 ‘건설 및 지역계획청(BBR) 설치에 관한 법’과 2008년 연방 도로·건축·도시개발부(BMVBS)가 발표한 ‘건축·도시·공간연구 분야의 통합 고지’에 따라 설치된 BBSR은 전문 연구기관이다. 2009년 1월 두 전문 기관, BBR과 건축물 보존 및 현대화협회(EMB)의 통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BBR은 2012년까지 BMVBS의 전문 연구기관이었고, 2013년 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BMUB의 연구소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주요 사업

주요 사업과 프로젝트는 BMUB와의 협의하에 1년 연구사업 안에서 결정된다. 공간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활용·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건축 및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포함한 개발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보고:** 지역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연구와 EU 위원회, 연방정부, 지방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작성
- **평가 및 분석:** 지역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문제 제기, 정책 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연구 관리 및 지원:** 연구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 **전문위원회:** 다양한 전문위원회에서의 공동연구, BMUB를 대리하여 국내 외의 정책 관련 위원회와 관련된 준비
- **정책 조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조연 제공
- **사업 관리:** 기술적·조직적·행정적인 지원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 관련 단체들의 지원 및 관리



기관의 구조

BBSR의 조직은 '지역 및 도시계획과'와 '건축 및 주거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및 도시계획과는 BMUB, 연방 교통 및 기반시설부(BMV)와 관련 기관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의 내용은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지역계획·지역개발 관련 정책 분야의 정보 수집, 연구 및 기술적 조언 등이다. 지역 및 도시계획과 내의 7개 부서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 부서 간의 협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 및 주거과는 정책·연구 및 실무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 및 주택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조언을 제공한다. 총 9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업무는 3 개의 부서에서 진행되고, 건설과 관련된 업무는 6개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건축 및 주거과는 정책 입안자를 위해 건축 및 부동산시장, 주택산업, 비용 절감 및 주택 보조금과 관련한 분석을 수행하고 보고하며, 정기적으로 주택 산업의 변화에 대한 예상안 작성과 이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또한 건축,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건축 및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가 소유한 건물들에 대해 건축기술 지침들을 작성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핵심과제로서의 연구교류·응용

BBSR은 지역계획, 도시계획, 주거, 부동산, 건설 및 건축문화와 관련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과학·연구 등 세 가지 분야의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들을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진행한다.

- 다양한 사회 분야들로부터의 건축·공간과 관련된 문의와 문제 제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단기적인 평가와 장기간의 조사 및 평가를 고려한 적합한 분석과 평가
- 여러 분야 간의 학문적 연계와 정치 및 행정 분야의 사용자 집단을 위한 전문 지식의 생산과 공유
-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계획적이고 정치적인 수단 및 조치로 제안하고 권고

진행 중인 프로그램

BBSR은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주거, 부동산 개발 등의 이슈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역

“BBSR은 지역계획,
도시계획, 주거,
부동산, 건설 및
건축문화와 관련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과학·연구 등
세 가지 분야의 중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적인 이슈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개발원칙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위한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사업지원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 등이다.

- **ExWoSt(Experiment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도시개발 및 주거 정책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시 및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계획안이나 조치에 대한 연구·조사, 시민단체 지원, 개발모델 수립
- **MORO(Demonstration Projects of Spatial Planning)**: BMV의 지원을 받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계와 실무진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제 대상지에 대한 계획을 하며 전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되어 진행
- **FoPS(Research Program City Traffic)**: 실제 적용 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교통계획에 관한 연구 지원
- **Zukunft Bau(Future Building)**: BMUB 산하의 연구단체로서 유럽 건축시장에서 독일 건축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문화·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 2002년 EU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유럽 내의 공간계획에 관련된 정책과 전략적인 정책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INTERREG(Trans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tial development)**: EU 내에서 경제·사회·공간적인 결집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
- **ZIP(Future Investment Program)**: 도시계획, 공공시설 재정비, 주거를 위한 미래계획 지원 프로그램

BBSR은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그 연구결과가 우리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와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BBSR의 생각은 소장 하랄드 헤르만(Harald Herrmann)이 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의 연구는 상아탑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의 초점은 도시와 지역의 사용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문헌 · BBSR 홈페이지(<http://www.bbsr.bund.de/BBSR/>)
· Jahresbericht "Forschung im Blick 2015/16", BBSR

건축과 도시공간

—

Vol. 24

Winter 2016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불암산 아랫자락 저층 주거지 틈, 부정형의 대지 위해 꼭 그 모양을 닮은 '행복발전소'가 들어섰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책 한 줄을 읽고,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 얼굴 맞대고 답소를 나눈다. 부지 뒤편에 덩그러니 버려졌던 양곡창고가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다. 미래의 이용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담아냈고, 그랬기 때문에 '동김제농협 로컬푸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

건축이 들어설 대지와 맥락, 이용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담아낸다. '사연 있는 건축'의 탄생. 이는 곧 '이유 있는 건축',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당당한 목적이 있는 건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 불암골 행복발전소
096

농촌마을의
양곡창고 이야기
-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112

摩訶般若波羅蜜經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 불암골 행복발전소
096

농촌마을의
양곡창고 이야기
-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112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 불암골 행복발전소 | 불암골 행복발전소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이 운영하는 북카페가 같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센터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는 북카페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 역할은 아주 다르다. 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북카페는 동네주민에게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제공한다.

농촌마을의 양곡창고 이야기 -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980년대까지 양곡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활용하여 오랜 마을의 중심지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직매장 건물 내·외부 공간이 마을의 다채로운 장(場)으로 거듭나도록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공간을 마을의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토록 하였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을이
행복하다

불암골
행복발전소

정영섭

홍영애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 노원구 중계로14길 53
용도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대지면적	469,00m ²
건축면적	270,08m ²
연면적	270,08m ²
건폐율	57.74%
용적률	57.74%
규모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기간	2014.8.~2016.4.
시공기간	2015.4.~2016.4.
설계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건축주	노원구청



불암골 행복발전소 전경





불암골 행복발전소는
불암산 아랫자락까지
밀려온 아파트 사이에
겨우 남아 있는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의 모양을 따라
실들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실들이 모여
한 건물이 되는 모습이
집집이 모여 마을이 되는
모습과 닮았다. 실의
모양을 따라
층고를 다르게 하고
지붕을 경사지게
계획하였다.

각기 다른 경사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실





© HJ
02



© HJ
03

상 어느 곳에서도 바라보이는 중정
하 아이들이 뛰어노는 옥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북카페



상 풀잎 돌봄교실
중 커뮤니티 마당
하 중정을 통해 연결되는 옥상

마지막까지 힘들고 지치지만
 북카페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은
 이분들의 만족이
 주민의 만족이 되어,
 살아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HJ
 02

마을 중심, 주민 중심

2014년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되어 처음으로 공공건축물 지명 현상을 하게 되었다. 노원구 중계동 지역아동센터 신축설계 공모전은 아동센터와 북카페 두 프로그램을 같은 공간에 계획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자 기대하는 바였다.

대지는 불암산 아랫자락까지 밀려온 아파트 사이에 겨우 남아 있는 저층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작은 골목에도 항상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동네이다.

기존 대지는 3개 필지였다. 무허가 건축물 사이로 작은 지름길이 있었다. 주민들이 이 길을 통하면 돌아가야 할 거리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지름길이 분명하다. 3개의 필지를 합치니 대지가 불규칙한 모양이 되었다. 북카페와 돌봄교실 2개, 사무실, 주방이 요구되었다.

대지의 모양을 따라 실들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실들이 모여 한 건물이 되는 모습이 집집이 모여 마을이 되는 모습과 닮았다. 실의 모양을 따라 층고를 다르게 하고 지붕을 경사지게 계획하였다. 철거 전 건물은 청소년 쉼터로 공공시설이긴 하였지만 주민에게 열린 공간은 아니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주민들은 북카페와 아동센터가 신축되는 것을 반겼다.

기존 건물이 1층이었고 예산과 쓰임을 고려해 규모는 동일한 1층으로 계획하였다. 인접 대지 입장에서 공공건축물이 신축되어 조망이나 채광에 피해가 생긴다면 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모와 용도에 민감하다. 1층 건물의 옥상은 주변 3~4층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니 제2의 입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옥상의 모습도 중요하게 계획하였다.

오후 내내 돌봄교실에서 지낼 아이들을 생각하니 야외 공간이 절실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실을 배치하고 중정을 통해 옥상이 활용되도록 하였다. 중정의 슬라이딩 창호가 열리면 마주보는 두 복도는 한 공간이 된다. 실내와 실외가 구분 없이 이용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정의 매력이다.

공모전에 당선된 후 작은 규모지만 구청장 보고를 두 번 하고 경관심의를 받았다. 설계자로서 다행스럽게도 당선안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구는 이미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몇몇 공공건축물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다. 건축가의 고집에 대해서는 피곤해 하였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었다.

©moldproject



상 불암골 행복발전소 전경
중 별모양의 부정형 대지
하 각기 다른 경사의 지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실



12-1-1



상 풀잎 돌봄교실
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북카페

주민의 요구에 민감한, 효과적인 설계

아파트 단지 안에는 법에 의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하지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은 곳은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이 놓치면 주민이 공공의 서비스를 누릴 공간이 없게 된다. 구는 이런 주민의 요구에 현명하고 세심하게 대처하였다. 공유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비용을 아끼고, 규모도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다(오히려 작은 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를 애써 설명해야 하였다). 작은 기획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도 적다. 사업 기간도 비교적 짧아 주민의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운영 중인 아동센터·북카페를 방문하였다. 주관부서는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도 높은 수준의 문화 욕구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불암골 행복발전소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주민이 운영하는 북카페가 같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센터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는 북카페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 역할은 아주 다르다. 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북카페는 동네주민에게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제공한다.

공모전과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은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이미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아동센터와 북카페 운영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였다. 거기에 공사기간 중 감리를 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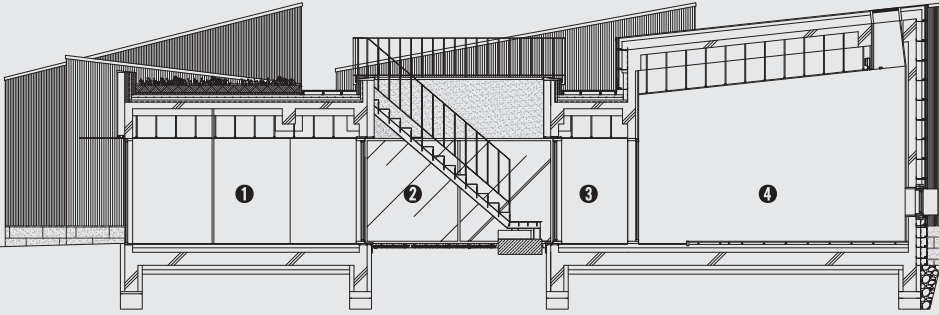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아동센터를 운영할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 북카페를 운영할 주민을 만나 구체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할 수 있었다. 신나고 즐겁지만, 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실제 운영자와 세밀한 쓰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계획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당초 계획을 고쳐 나가는 것은 괴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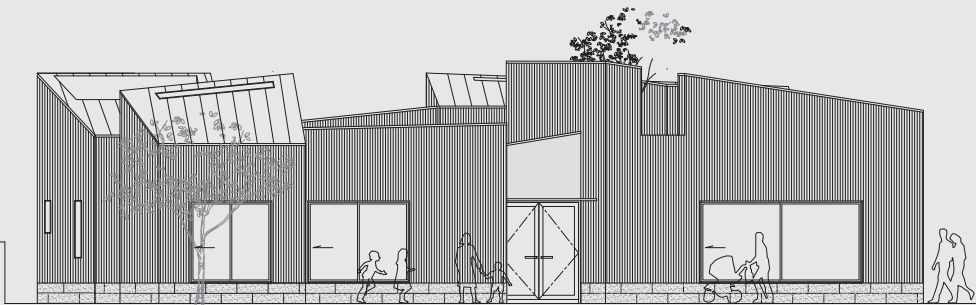
- 1 나무 돌품교실
- 2 풀잎 돌품교실
- 3 꽃잎 돌품교실
- 4 찬샘 북카페
- 5 사무실
- 6 열매 주방 겸 식당
- 7 중정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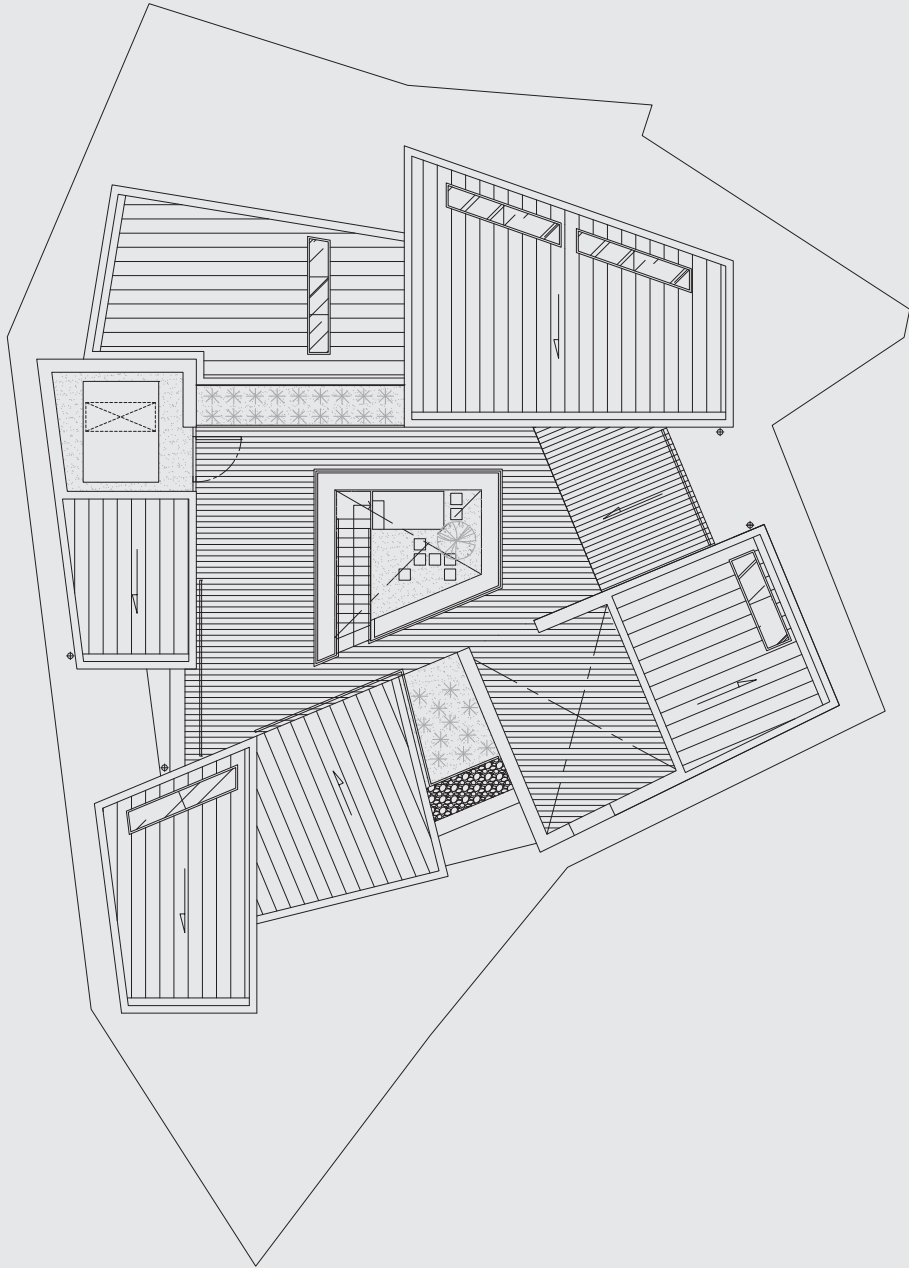
- 1 입구
- 2 중정
- 3 복도
- 4 나무 돌봄센터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12-10



상 옥상과 중정
하 어느 곳에서도 바라보이는 중정

북카페는 정말 주민들이 운영한다. 바리스타도 없다. 바리스타가 없으니 접대하는 바(bar)도 필요 없다. 벽면으로 최소한의 카페를 구성하였다. 조작이 쉬운 자동 커피머신을 두고 음료도 냉장고에서 스스로 꺼내 마신다. 자신이 먹은 컵은 자신이 설거지하고, 커피값은 바구니에 낸다. 북카페를 운영하는 허선영 선생님은 “책을 읽는 공간이 먼저예요. 커피는 그 다음이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북카페 ‘찬샘’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고 진지하지만, 주민의 유쾌함과 즐거움도 가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노원구청에서 운영한다. 임리아 센터장을 비롯해 돌봄 선생님에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의도를 설득하고 선생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인테리어 설계를 하였다. 우리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네 어른들의 돌봄과 눈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골목길 쪽과 복도 쪽 벽면에 큰 창호를 계획하였다. 창턱에 의자와 텃마루를 계획해 지나가는 주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랐다.

하지만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었다. 운영 방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런 점이 설계자와 운영자가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생기는 아쉬움이다. 그래도 설계자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공공의 가치, 주민의 가치

가끔 설계자의 계획과는 다르게 무단으로 증축되거나 외관이 변경된 공공건축물을 볼 때가 있다. 이런 일이 사용자의 건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일까? 설계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득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공공건축물 운영자를 설계에 우선하여 선정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제안한 부분이 있다. 간판과 그래픽 계획을 전문 디자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었다. 공공건축물의 마지막 완성도는 조명·간판·조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설계자가 애써 고민한 부분이 망가져 버린다.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우리의 설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였다. 디자이너가 추가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불암골 행복발전소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폰트도 디자인하였다.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전화가 온다. 간판과 사인, 폰트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다. 작은 제안과 노력으로 공공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더 좋은 일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힘들고 지치지만 북카페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은 이분들의 만족이 주민의 만족이 되어, 그래야 살아 있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암골 행복발전소 북카페 찬샘은 주말에도 문이 열려 있다. 금요일 저녁 독서모임을 위해 마당에 조명을 달았다. 행정이 운영하면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운영자가 이런 흥겨운 제안을 하면 설계자는 좋은 조명을 달면 된다.

첫 공공건축물을 완공하였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자에 편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분들과 편하게 어울려 앉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 2016



상 커뮤니티 마당
하 아이들이 뛰어노는 옥상

농촌마을의 양곡창고 이야기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최정우
이승윤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공동대표

개요

위치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437번지 외 4필지
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대지면적	5,607.0m ²
건축면적	1,277.3m ²
연면적	1,759.6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8.3m
건폐율	27.08%
용적률	35.54%
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적보강
구조설계	터구조
설계	최정우, 이승윤
설계담당	강한샘, 전우진
시공	메카건설
기계·전기설계	청림설비, 대경전기
설계기간	2013.5.~2013.12.
시공기간	2014.1.~2015.6.
공사비	약 16억 원
건축주	동김제농협 협동조합



교육장에서 본 야경

논에서 기계로 직접 수매하는 방식이 생기며
용처를 잃은 양곡창고를 고쳤다.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지만 부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쉽지만 몹시 어려운 결정이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은 활력을 잃은
동네에 다시 작농에 열정을 쏟고, 농촌에 올 수밖에
없던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일자리가 되었다.
방문한 날 비가 왔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가득 찰 만큼 붐빈다.
이 시골에. 거점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은 아름다웠고,
그것을 담은 건축은 사랑스러웠다.

2015년 한국농촌건축대전 심사평 中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전경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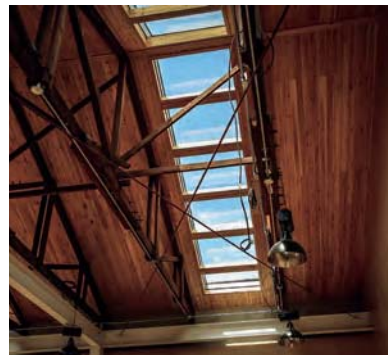
© 최정우



© 최정우



© 최정우



© 최정우



© 최정우

상
좌·중
우

교육장 휴게공간
직매장 회랑 전경
환기와 채광을 위한 천창

여러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져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방문객들에게
일회적이거나 고정적인
풍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험치를
‘제공하고, 서로 상생하는
자체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최정아



레스토랑 전경

로컬푸드(Local Food)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가급적 생산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로 벌이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작은 단위지역 내에서 농산품 수급체계를 확보하여 산지에서부터 식탁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이며, 현재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장소성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단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들어선 경우가 적지 않다. 소위 지역건축으로서의 맥락과 지역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마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기존 매장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취하였다. 첫째, 1980년대까지 양곡창고로 쓰이던 건물을 활용하여 오랜 마을의 중심지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직매장 건물 내·외부 공간이 마을의 다채로운 장(場)으로 거듭나도록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 공간을 마을의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토록 하였다.

창고(Granary)

2014년 5월에 동김제농협과 첫 미팅을 가졌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규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농협 측에서는 해당 부지의 단층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하고 2개 층의 마트형 매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땅의 위치가 마을의 간선도로와 너무 인접하였고, 크기도 차량진입 동선과 주차동선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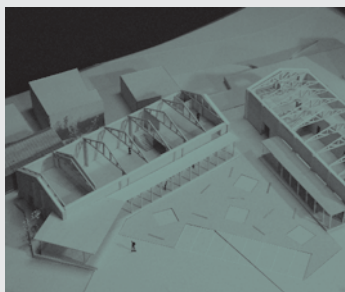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것은 해당 부지 뒤편에 덩그러니 놓인 양곡창고들이었다. 창고건물 3개 동이 기묘하게 엇갈려 가운데에 마당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 각각의 창고건물 크기는 대략 가로 27m, 세로 10m, 높이 9m 정도로 농협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볼륨이었다.

모두 목조 트러스의 박공지붕으로 전형적인 창고의 모습이었는데, 두 동은 1960년대에 지어진 조적조 건물이고 나머지 한 동은 1970년대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었다. 각각 내부 공간 일

©최정우



양곡창고로 쓰였던 기존의 단층 콘크리트 건물



상 로컬푸드 직매장 전경
하 리노베이션 모형

부를 비료와 농약을 쌓아놓고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 많은 부분이 비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일단 요청된 신축 건에 대한 규모 검토를 해 보겠다며 다음을 기약하였지만,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그 양곡창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뒤 결국 해당 부지의 신축을 위한 규모검토 내용과 함께 양곡창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발에 목마른 농촌마을로서는 낡은 창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조합원들 중 대다수는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쾌적한 마트형 시설을 원하였다. 그러나 마당이라는 가능성을 담은 공간,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재생하는 일의 가치, 공사비 절감, 시공의 효율성 등 다방면에 걸친 논의와 설득 끝에 리노베이션 동의를 받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프로그램은 로컬푸드 직매장, 저온창고, 식당동, 교육동 등 크게 네 가지였다. 주요 프로그램인 직매장과 식당동을 동선과 조망 등을 고려하여 각각 창고의 1층에 배치하고, 직매장 쪽에 신축 저온창고를 달아매어 동선을 연결하였다. 교육동은 기존 농협의 2층 강당을 고쳐사용하기로 하였다.

재생(Re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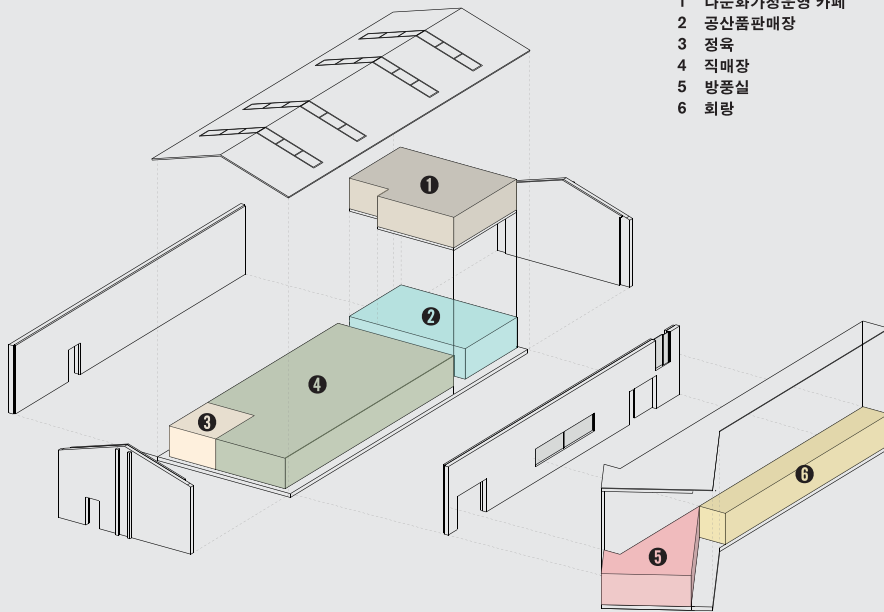
리노베이션 대상이 된 양곡창고 3개 동에 대한 구조점검과 안전진단을 2014년 8월 실시하였다. 조적조 2개 동 가운데 하나는 철거가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일부 벽체가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철골로 내부 구조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보강이 필요하였다. 나머지 RC조는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창고 볼륨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조 트러스 지붕과 조적벽을 최대한 남기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덧붙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였다. 진입공간에는 부분적으로 유리를 사용하였고, 실내공간에는 중층을 걸어 요구된 바닥면적을 충족시켰다. 환기와 채광을 위한 창은 되도록이면 천창으로 해결하였는데, 왜냐하면 기존 조적벽체에 개구부를 많이 두면 하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밖에 외부 회랑을 두어 2개 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마당을 비롯한 외부공간은 가능한 한 비워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쓰게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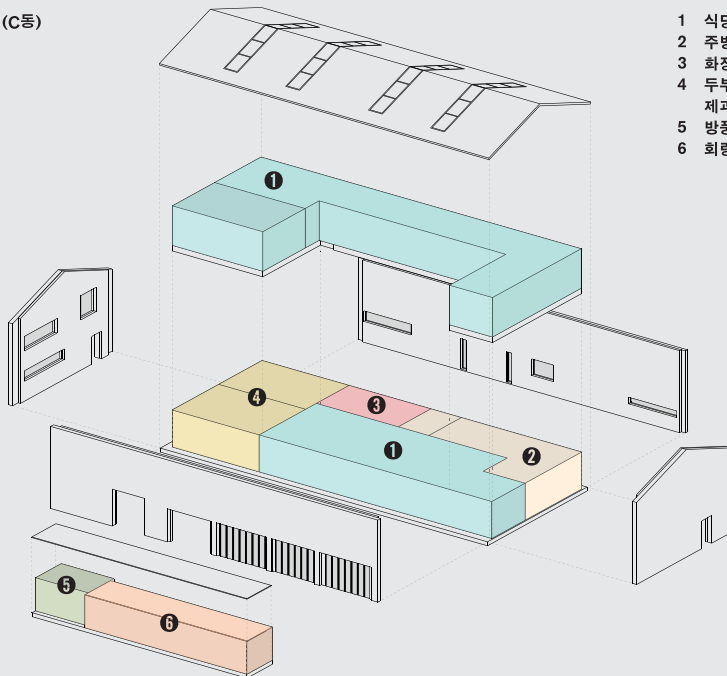
배치도

직매장 (B동)



- 1 다문화가정운영 카페
- 2 공산품판매장
- 3 정육
- 4 직매장
- 5 방풍실
- 6 회랑

식당 및 체험장 (C동)



- 1 식당
- 2 주방
- 3 화장실
- 4 두부체험장(지적장애 사회적기업),
제과제빵(다문화가정)
- 5 방풍실
- 6 회랑

프로그램 간 연계가 가능한 설계

용도(Program)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에 입주할 단체들과 꾸준히 만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가며 공간의 배치와 분할, 사용성을 함께 고민하였다. 그 덕분에 각기 다른 프로그램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당일 새벽 수확한 농산물이 직매장에서 다 판매되지 못하면 다음날에 옆 식당동에서 조리를 거친 뒤 한식 뷔페의 메뉴가 되고 직매장동의 일부에도 농협가공품 소매점이 있어서 반찬이 판매된다. 그리고 2층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 식당동의 한식뷔페는 마을의 어머니들이 만드는 식단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적장애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두부제조장과 직매장에서 파는 빵을 만드는 공간이 함께 자리한다.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져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방문객들에게 일회적이거나 고정적인 풍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험치를 제공하고, 서로 상생하는 자체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구조와 재료(Structure & Material)

조적조 건물은 철골포스트와 철골거더로 보강하였다. 기초부는 기존 하부기초를 추정한 후 이격하여 형성하였다. 지붕의 목조 트러스 부분은 벽체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철골거더에 일체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RC조의 건물은 중층이 형성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경량철골로 보강하였다. 개구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는 별도의 철재 보강을 더하였다.

설계는 제한된 공사비에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구조 변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였고, 창고 2개 동의 볼륨과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재료는 최대한 저렴하고 지역 내에서 수급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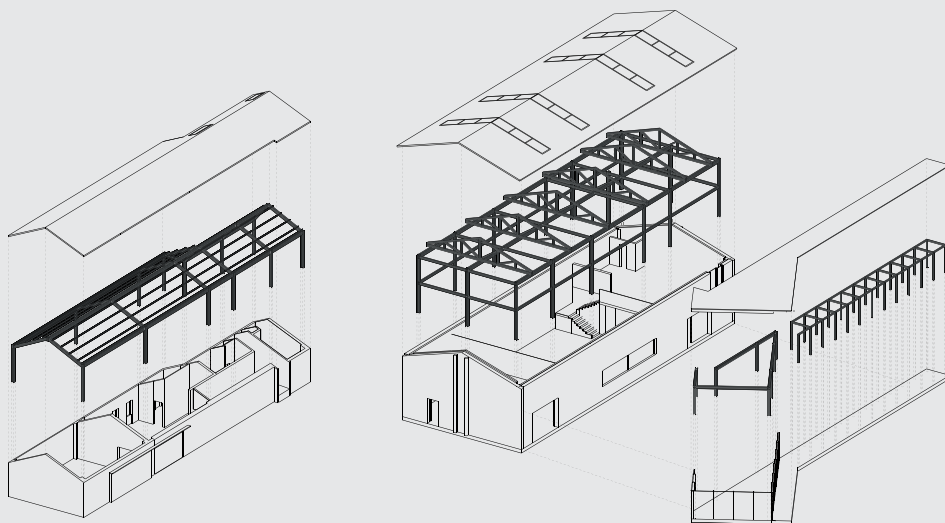
지붕 목조 트러스는 보수를 거쳐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창고의 특성상 어둡고 환기가 취약하였는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개구부를 벽에 두고 천창을 사용하였다. 내부에 새롭게 덧붙인 마감재들이 기존 오래된 벽체와 대비되기를 의도하였다.

©최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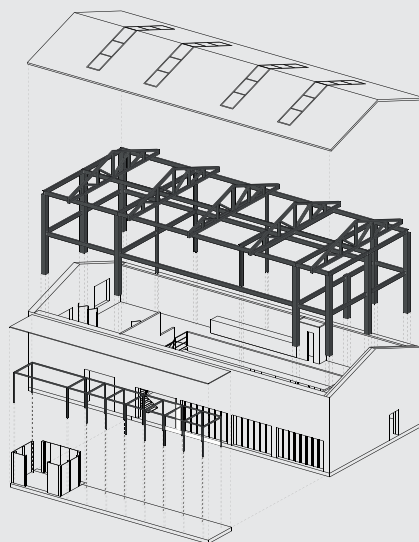


환기와 채광을 위한 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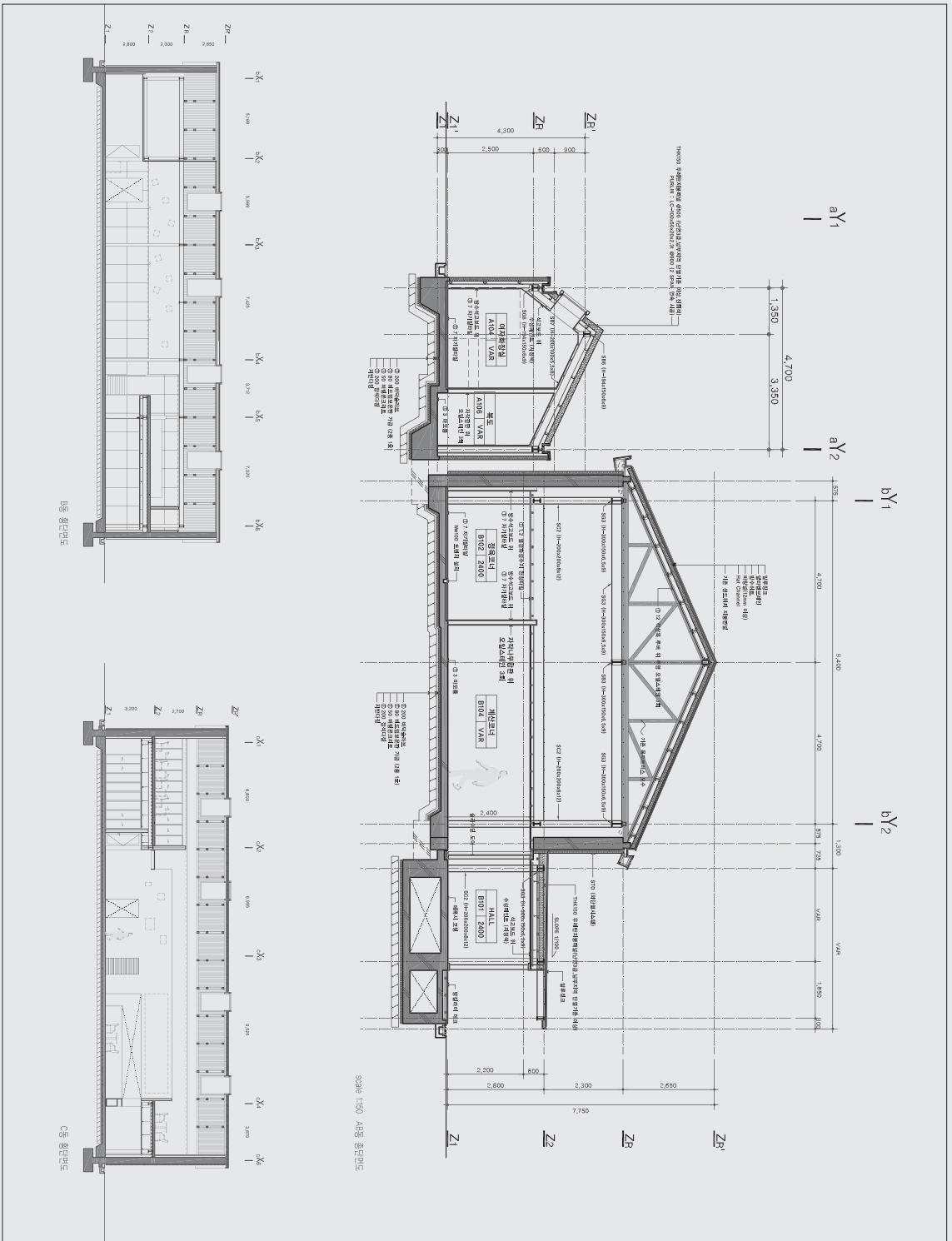
직매장 및 소포장실(A, B동)



식당 및 체험장(C동)



■ 새로운 철골 구조



실시도면



©최정우
부음



상 레스토랑 전경
중 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하 교육장 휴게공간

시공(Construction)

철거가 시작되는 날부터 보강이 완료되는 날까지 내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설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조적벽체는 예상보다 더 힘이 없었고 콘크리트 보들은 크기와 배근이 각기 달라서 당혹스럽게 하였다. 목조 트러스는 전후좌우 부재가 뒤틀려 있어 일부는 해체 후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고, 철골 기둥을 창고 내에서 조립하여 세워 올리는 등 현장 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남기는 것, 철거하는 것, 덧붙이는 것 등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시공 과정 내내 수많은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다행히도 좋은 결과물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시공사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 발주처 및 운영자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별 탈 없이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용(Using)

2014년 7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작고 소박한 장소이다. 지금도 가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기억에 남는 몇몇 주민들의 후기가 있다.

더 이상 육교 앞에서 추위에 떨며 고추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할머니, 매장 CCTV를 보다가 오이가 팔려나가면 얼른 가서 빈 매대를 채워 넣을 거라는 의욕 넘치는 아저씨, 늘 기르던 작물이지만 요즘 들어 특히나 재미있게 지낸다는 아주머니, 교육 이수 후 어엿한 바리스타가 된 어느 베트남 젊은 엄마. 앞으로도 이곳에 동김제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쌓여가기를 기대해 본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8

포럼 및 세미나
134

연구소 단신
140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연구	신치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김승남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성은영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 연구	이은석
수탁 과제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심경미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방안 마련 연구	김은희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	손동필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상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손동필
	2016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김은희
	행복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여혜진

수시과제

①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연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세종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한문화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시설, 창작촌, 전시판매장, 한옥호텔 및 한류식당 등 한문화의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집적화하는 '한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공공 부문 주도로 추진하기에는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이 크며, 창의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초기단계부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문화단지도 입시설 중 한옥호텔은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시설이나 다른 건축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건축 공사비가 요구되며, 공간 활용 및 관리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호텔의 수익구조 보안을 위한 전략, 조세 및 금융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문화단지 내 한옥호텔의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방식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옥호텔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한문화단지 조성계획 한옥호텔 건립(안)에 대한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유치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치후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행복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대

규모 신개발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서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진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행복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내부 교통망을 구축하고, 도심 내 각 생활권에서 보행이나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의 설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환상형 공간구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생활권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양질의 보행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된 지역의 보행환경이 당초 계획 설계 목표에 부합하게 조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복도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정책 이행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도시 1생활권에 대한 보행환경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건설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도시의 보행환경 조성 과 관련된 기존 계획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행복도시 1생활권의 가로유형별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보행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의 향후 보행환경 조성방향을 제안한다.

김승남

3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최근 부동산 시장 수요의 하락은 경제의 저성장과 시장 침체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금성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에 편중되어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다양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현실 속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주택의 건축

행위 역시 자본가들이 고급의 주택을 짓거나 혹은 자산의 증식의 방편으로 매매·임대하기 위해 최대용적률을 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빠르게 신축하거나 고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민들이며,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택의 성능이 낮거나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을 짓거나 고치는 데 봉착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원과 유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과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주택 성능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규모 주택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민간 단독주택 건설 시장의 비정상적 주택건설 시스템을 정상적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규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규모 주택의 품질 개선과 실용적 수단들을 연결하는 '안심 집짓기' 정책의 추진을 통해 소규모 주택건축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은영

4 무장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내 미끄러짐, 충돌 등 생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축법」(법률 제12701호, 2014.5.28.)과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5, 2014.11.18.)이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실내공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실내건축기준)이 마련(2015.10.)되었다.

현행 실내건축기준은 주로 방화, 추락,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의 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건축기준 주요 내용은 화재에 대한 불연성 재료 사용,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마감재 기준, 추락에 대비한 안전난간 기준, 그 밖에 완충재료·실내출입문·설비배관 등의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기준은 일반인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고령 화사회에서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실내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제도적으로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점을 피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법령검토를 통해 실내건축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법적 중복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내건축 기준의 법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은 수혜 대상의 확대, 적용 대상의 현황 반영, 적용범위 설정을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의 수혜 대상은 통상적 일반인에 한하던 것을 정상적인 보행 이동이 가능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으로 일반인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다. 건축물 적용 대상은 기존 실내건축기준의 적용 대상과 용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권고 대상을 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적용 범위와 해당 수준은 재료 또는 장식물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차별화하고, 무장애 디자인의 적용 수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실내건축기준에서는 무장애 디자인 기준의 저변 확대를 위해 권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실내건축기준 개선안이 고시되면 노약자 등의 실내생활에 있어 불편한 요소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건축물에 강화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 디자인 개념을 민간 일반 건축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가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석

수탁과제

① 지역경관향상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연구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전문성과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경관 형성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2009~현재) 및 민간전문가 지원사업(2015~현재)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계획가 및 디자인검토위원이라는 민간전문가 제도와 디자인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지역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가 전체 또는 일부를 총괄하거나 조정·자문을 통해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2016년의 경우 밀양시·시흥시와 웅진군 백령도 등 3개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2015년 연속지원으로는 강진군이 선정되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2015년 연속지원으로 익산시, 평창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남구 등 6곳이 선정되었다. 2016년 신규지원은 부여군·고령군·횡성군·포천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지원사업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기본적인 과업 내용으로 하면서,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실태(연계사업 추진 현황, 예산확보 여부 및 규모, 효율적 예산운용 현황, 관리체계 도입 여부, 민간전문가의 지속적 참여 여부 등)와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예산 교부방식, 유사 사업체계와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의 방안 검토를 통해 지원사업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지원사업의 성과 홍보와 지속성·필요성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장소 중심 계획 수립과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관리기반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심경미

②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방안 마련 연구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체 수는 약 9,100개, 종사자 수는 5만 7,000여 명, 연간 매출액은 5조 1,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업체 수는 약 70개로 전체의 0.8%이지만 그 매출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40%가 넘는다. 반면 종사자 1~4인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약 6,800개로 전체의 75%나 되지만 매출액은 6,900억 원으로 약 13%에 불과하고, 그중 만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가 그 절반을 차지한다. 건축설계 분야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시장 형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신진건축사의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수상전)과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전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0여 명의 우수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건축사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우수 건축사 발굴 및 양성 정책사업 기획과 관리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가 주요 대상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정책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와 신진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정책사업의 운영 및 관리, 홍보를 지원하며 2017년도 신규 사업 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추진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신진건축사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우리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실태와 발전 동향, 신진건축사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③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부는 공원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중 절반 이상(62%)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상당수가 2020년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대다수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어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5만m²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30%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1만~5만m² 규모의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해 1만~5만m² 규모의 중·소규모 공원에 일부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설되는 민영공원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시설을 발굴 및 유형화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수익시설의 유형별 설치기준을 종합하고 시각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민영공원의 예상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영공원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도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④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년 1월 7일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5년 단위로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조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조경 분야가 직면한 여건 분석과 현안 발굴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별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관계부처와 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T/F 운영, 간담회 등의 연구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건강, 공간복지, 생물다양성 등 국가 및 도시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어젠다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조경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국민건강 증진, 녹색복지 및 형평성 제고, 생물종 다양성 향상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조경은 1970년대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복구를 위해 도입된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나무와 꽃을 생산하고 심는 것'이나 '화장술로서의 조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공간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도 건축·도시·토목 분야의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규제완화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조경산업 역시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침체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한 비전으로 '건강한 삶, 품격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구현'을 설정하였다. 3대 목표로는 조경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공급 확충, 조경산업 진흥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인적자원 개발 및 선진 조경문화 정착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으로 조경서비스의 가치 제고 및 품질 향상, 조경인프라 양적 공급 확대 및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조경산업 발전기반 구축, 조경 관련 제도 개선 및 R&D 활성화, 조경 교육기반 구축 및 인

적자원 개발, 선진 조경문화 보급 및 확산을 설정한 후 전략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조경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규

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

2014년부터 법무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6년에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토교통부 협력사업 5곳[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1곳(서울 구로),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4곳(경북 김천, 부산 사하구, 강원 동해, 인천 동구)], 국민안전처 협력사업 5곳(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인 대전 서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 세종, 울산 동구), 법무부 자체사업 2곳(전북 익산, 경기 고양)의 사업대상지를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예방 측면에서의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범죄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법무부는 학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별 기초자료조사와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범죄위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CPTED 기본원리와 건축·도시 계획요소에 따른 물리적 계획기법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종합 기초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추후 사업대상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별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결과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

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범죄유형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공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손동필

⑥ 2016년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경제순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살을 포함한 사고성 사망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위(10만 명당 70.2명) 수준이다. 아직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다.

이에 2014년 국민안전처는 4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및 전국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사고·화재·범죄·안전사고·자연재해·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하였고, 이후 지역별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망자 수 감축으로 측정되는 지역별 안전지수를 높이고자 국민안전처가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토대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성과 달성 목표 설정, 사업추진주체 및 거버넌스 구축, 중간지원조직 구축, 중점개선지구 및 안전인프라사업과 안전문화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17개 지자체의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종 성과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차별성으로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부서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부단체장을 총괄 팀장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단속, 확인·점검, 교육·홍보 등 3대 핵심 수단을 적극 활용토록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기관과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사망자 수 감축과 안전지수를 제고하는 한편 2010년 안전도시, 2014년 안심마을, 2015년 안전마을에 이어 지역기반 안전문화 실현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희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주민센터가 원스톱 커뮤니티 서비스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주민센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의집, 체육관과 주민에게 전면 개방되는 알파룸으로 구성된 공공청사 및 주민복합센터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이다. 세종시 신도시지역 21개 생활권에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6년 12개 시설의 준공·착공·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남은 10개 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을 개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한 특화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권 단위 인구·가구 특성 및 최근의 계획이슈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시설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 이용자 사용 후 평가, 주민 수요조사, 주민 인식조사, 운영 관리자 면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고자 이뤄졌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전략으로서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디자인 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디자인 관리 체계 개편,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생활권 단위 주민 생활의 중심 장소가 조성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Walkable & Safe City)’를 주제로,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과 개선 사례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보행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국 앤 무돈(Anne Moudon) 교수(워싱턴대학교)는 ‘안전한 보행자, 건강한 도시’를 주제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 거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뒤를 이어 발표한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는 ‘보행의 혜택, 착각과 재확인’이라는 주제로, 걷기의 의미와 보행의 장점을 소개하고 걷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다루었다. 먼저 일본 마쓰이 야스히로 주석 연구원(교통안전환경연구소)이 ‘도로횡단 중 노인 보행자 시야의 특성’을 주제로, 노인 보행자들의 보행안전에 연령·시력·차체색상 등이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강진동 과장(서울시 교통운영과)이 ‘보행자 교통안전정책’을 주제로, 도심 보행길 조성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서울시의 보행안전 추진 사업을 소개하였다.



‘보행안전의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마리오 J. 알버스(Mario J. Alves) 국제보행자연맹 사무총장이 ‘유럽 교통안전 이야기 산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유럽이 직면한 교통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이어 심재익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보행안전을 위한 실질적 접근’을 주제로,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섬 설치 등 횡단보도 환경 개선과 50/30 속도 전략 도입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하동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8명의 보행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에는 보행안전과 관련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 학생 등 모두 220여 명이 참석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문화 확산 전략을 공유하였다.

백혜인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11월 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을 열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한옥포럼을 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2회의 한옥포럼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옥마을의 모습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옥마을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최근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조성된 한옥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조영귀 소장(금성건축사사무소)이 ‘강릉 한옥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통미와 신기술을 적용하여 주변 문화재(오죽헌)와 소통하는 21세기 한옥 체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과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최유종 교수(충북대학교 건축학과)가 ‘세종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전통 한옥마을의 공간개념과 현대적 편의성을 반영한 한옥마을을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건설하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한옥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전국에 조성된 한옥마을의 추진 현황과 조성된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통해 향후 한옥마을 조성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김성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권영상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석순 소장(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주식 팀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경관팀), 안국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북상규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과 발제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방청객과 함께 한옥마을 조성사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무엇보다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성 목적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식과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번 포럼은 ‘박제되어 있는 한옥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찾고, 살고 싶어 하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획·계획·시공 등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 깊은 자리였다.

이민경



2016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 포럼이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2011년 이후 6회째를 맞은 '2016 녹색건축한마당' 내 녹색건축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을 연구하면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4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녹색건축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녹색건축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포럼은 4개의 주제발표와 발표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첫 주제발표에서 박환일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전망'과 관련하여 녹색산업의 정의·특징·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강화와 정치적 위기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 차정하 대표(써스테라파트너스)는 '부동산 펀드 및 개발사업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녹색건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는 김서철 부사장(㈜소프트벤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에너지 진단 및 관리 플랫폼'을 주제로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진단서비스 및 핵심기술, 주요 서비스,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컨설팅 시장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민현준 소장(㈜친환경계획그룹 청연)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 소장은 서울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녹색건축물 적용과 그린리모델링 효과, 그리고 녹색건축물의 미래를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Hall C에서는 2016 녹색건축한마당 전시도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의 소개와 녹색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추진성과, 향후 녹색건축신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패널을 전시하였다. 또 최근 개발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건축산업과 다양한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소운



CPTED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6일과 10월 28일 2회에 걸쳐 CPTED 세미나를 열었다.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는 CPTED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CPTED의 이론적 지식함양과 실무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6일 열린 세미나는 '범죄예방 디자인 이론적 배경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하에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수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범죄 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CPTED의 접근 방식과 세부 전략을 설명하였다. 특히 CPTED 적용에 있어 4단계의 프로세스(현황 파악 → 계획 수립 → 전략실행 → 유지·관리)를 소개하며 현황 파악을 위한 범죄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였다.

10월 28일에 'CPTED 관련 표준과 적합성 평가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인 박현호 교수(웅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박 교수는 CPTED 표

준 현황으로 국제표준·국가표준·단체표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국내 CPTED 관련 인정·인증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표 사례로는 2016년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된 안산시 1차 시범사업을 꼽았으며, 실제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주택 방법 제품을 설치한 이후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감소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범죄예방시설로서 침입방지 인증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주력해야 함을 설명하며, CPTED의 실효적 대안으로서 방법 하드웨어에 의한 타깃 하드닝(Target Hardening: TH)을 강조하였다.

이들 세미나는 CPTED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국내 시범적용 사례를 통해 실무적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슬기



2016 제5차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지난 11월 9일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올해의 마지막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auri 마을재생 세미나'는 재생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올해 총 다섯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5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는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통한 학생들의 재생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재생에서 공공미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접근·개선하는 것으로, 최근 마을재생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군산대학교 학생들의 프로젝트와 연계하고자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아티스트 젤리장 작가와 어반 플레이 홍주석 대표를 모시고 '마을과 예술의 만남, 공공미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발제자들의 특강과 토론시간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시도와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갖는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내년에도 도시재생 참여주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변은주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좋은 공공건축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1차 세미나(공공도서관 조성 과정 및 개선사항-청라국제도서관 및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9월에는 2차 세미나(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과정 및 개선사항 논의-한성백제박물관, 시화호 조력발전 홍보관을 중심으로)가 개최되었으며, 이어 10월 5일 3차 세미나와 11월 14일 4차 세미나, 12월 21일 5차 세미나가 열렸다.

'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과정 및 개선사항 논의'를 주제로 지난 10월 5일 열린 3차 세미나는 황재식 대표(디자인·랩)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 사례(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북서울미술관)를 참고하여 전시시설 설계와 추진 과정의 특징, 공공기관에서 조성하는 문화·집회시설의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좋은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원칙과 지향점'을 주제로 11월 14일 열린 4차 세미나는 신승수 대표(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신 대표는 2014년 출간된 저서 「슈퍼 라이브러리」의 기획 의도와 발간 배경,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지향점, 좋은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21일 열린 5차 세미나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박인수 대표(파키즈건축사사무소)의 강연으로 진행하였다.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건축산업의 지향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제도 개선과 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김지현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다. 2016년도에는 '도심 속 한옥'을 주제로 준공·계획·사진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0개 등 모두 51개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서울 은평구의 '목경헌'(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이 선정되었다. 목경헌은 '한옥의 전통적 구성과 현대건축의 세밀함이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획 부문 대상은 한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를: 서촌을 위한 비한옥'(한국예술종합학교 이소영)이 수상하였다.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이 갖는 아름다운 선과 공간 구성을 잘 담아낸 '점·선·면'(김용준)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700여 개 작품이 출품되어 한옥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심 속 한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한옥이 과거를 넘어 현대적 삶의 공간에 자리 잡고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치후

2016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시행한다. 지난 10월 26일과 28일에도 각각 서울 건설회관과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유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건축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 ‘제안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식’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먼저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국무총리상(대상)을 받은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에 대하여, 사업의 MP로 활동한 박정아 선임님(구산동도서관마을)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를 통해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건립 배경과 추진체계, 주민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풀어진 조성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을 주제로 오성훈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교육이 이어졌다.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유형들을 설명한 오성훈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건축과 공공의 역할,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제안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방식’을 소개하며, 제안공모 방식의 시행절차 및 설계발주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약 350명의 공공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 사업에 적합한 설계발주방식 선정 등에 대해 공공건축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희



도시재생 스타트업 토크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스타트업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크쇼는 국토교통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6 도시재생 한마당' 내 오후 세션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근린형 도시재생의 최전선인 실행 단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도시재생 스타트업은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 쉼표를 위한 팝업 식당 '테스트키친 서울'을 운영하는 '로컬디자인무브먼트', 공간의 유희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앤스페이스'와 같이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창작하고 운영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번 토크쇼에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주체들이 참여하여,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조발제로 행사의 문을 열었으며, 오창민 사무국장(협동조합 성북신나)의 사회로 본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토크쇼는 두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다. 1부 '유희공간, 콘텐츠와 만나다'에는 김수민 대표(로컬디자인무브먼트), 김지은 대표(블랭크), 이상욱 대표(어반하이브리드), 정수현 대표(스페이스클라우드), 홍주석 대표(어반플레이)가 참여하여 도시의 유희공간을 콘텐츠화한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체들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2부 '청년, 지역으로 창업하다'에서는 김동찬 대표(만인의 꿈), 김인혁 대표(너나들이 충주청년협동조합), 전충훈 대표(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최광운 대표(천안청년들)가 지역의 자원,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사업가들의 창업 배경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석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번 토크쇼는 도시재생의 실행주체로서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활동과 가능성을 소개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실행주체 발굴을 고민하는 지자체와 전문성 있는 우수 도시재생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이 되었다.

윤주선, 박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해비타트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1월 17일 한국해비타트 대회의실에서 빈집 정비 등 주거복지 사업과 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빈집 정비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의 연계 지원 및 실행 ▲주거지 재생 사업의 정책 발전을 위한 정보·인력의 교류 및 협력 ▲집수리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해비타트는 앞으로 빈집 정비 및 사회주택 확산 등 주거권 회복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기관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백혜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2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조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조성사업 홍보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 온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혜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16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6-1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전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1,000원

AURI-기본-2016-2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6-3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6-4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20,000원

AURI-기본-2016-5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6-6
유흥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17,000원

AURI-기본-2016-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6-8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 연구
-외래진료부를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6-9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AURI-기본-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1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9,000원

AURI-기본-2016-12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3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6-14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17,000원

AURI-기본-2016-16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7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360°동영상과 VR 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25,000원

AURI-정책-2016-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11,000원

AURI-정책-2016-3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6-4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6-5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9,000원

AURI-정책-2016-7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8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9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10,000원

AURI-정책-2016-10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13,000원

AURI-협동-2016-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19,000원

AURI-한옥-2016-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16,000원

AURI-보행-2016-1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발 연구
25,000원

AURI-보행-2016-2
가로단위 보행환경 평가체계 개발 연구
26,000원

AURI-보행-2016-3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1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2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11,000원

AURI-범죄예방-2016-1
도농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20,000원

AURI-마을재생-2016-1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9,000원

AURI-공공건축-2016-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13,000원

AURI-공공건축-2016-2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15,000원

2015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5-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공공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5-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5-4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8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5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2,000원	AURI-정책-2014-8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5-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31,000원	AURI-협동-2015-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26,000원	AURI-기본-2014-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4-1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21,000원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7,000원	AURI-한옥-2015-1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점 사례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7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민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14,000원	AURI-한옥-2014-1 현대 한옥기술의 변화와 전망 29,000원
AURI-기본-2015-8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2 목재수종 및 제재방법에 따른 단가변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4-8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4-2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 (3) 19,000원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3 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방안 10,000원	AURI-기본-2014-9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30,000원	AURI-한옥-2014-3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 (1) 16,000원
AURI-기본-2015-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28,000원	AURI-보행-2015-1 2014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기본-2014-10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22,000원	AURI-한옥-2014-4 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17,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4-1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8,000원	AURI-한옥-2014-5 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1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2,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2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4-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13,000원	AURI-한옥-2014-6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3) 22,000원
AURI-정책-2015-2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000원	2014년 연구보고서		AURI-한옥-2014-7 2014 한옥 통계 백서 12,000원
AURI-정책-2015-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22,000원	AURI-정책-2014-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6,000원	AURI-보행-2014-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Ⅱ) 19,000원
AURI-정책-2015-4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별책]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면접조사 9,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보행-2014-2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정책-2015-5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21,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보행-2014-3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4,000원
AURI-정책-2015-6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11,000원	AURI-기본-2014-3 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5-7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9,000원	AURI-기본-2014-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29,000원	AURI-정책-2014-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11,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도심활성화 마스터플랜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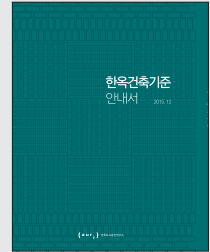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한옥 시공 핸드북
이강민, 고영호, 김꽃송이
비매품



한옥건축기준 안내서
이강민, 이세진
비매품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안내서
신치후, 김가람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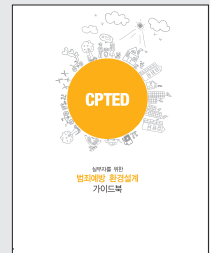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5
차주영, 이상아, 현태환
비매품



마을재생 거점모델로서
공유주거 조성·운영 매뉴얼
서수정, 변은주
비매품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
김승남, 조상규, 김신성 외
비매품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법무부
비매품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
오성훈, 임동근
20,000원



외관 김동현 구슬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10,000원



한옥 고치는 책Ⅲ -
마당·담장·대문 그리고 외부설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고치는 책Ⅱ -
주방·욕실·다용도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한옥 정책·제도·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